

정책자료 2019-03

#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정은희·전지현

**【책임연구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조건부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공동연구진】**

전지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3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발행일 2019년 12월

저자 정은희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ISBN 978-89-6827-620-0 93330

## 발간사 <<

기초보장제도 현장 모니터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과 기초보장제도 관련 현장 전문가를 포럼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초보장제도의 운영 및 집행 관련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본 사업은 올해로 12년째이다. 모니터링의 주제는 기초보장제도 및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해 새롭게 선정하여 진행된다. 올해는 사회적 불안,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사각지대와 부정수급과 관련한 주제를 선정하여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본 사업 운영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현장성에 근거한 제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점검하여 제도를 조정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사업은 정은희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전지현 전문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다. 본 사업을 위해 포럼에 참여하여 의견을 주시고 서면으로 의견을 주신 제7기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에게 감사드린다.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본 연구원의 소득보장정책연구실 박사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자의 견해임을 밝힌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 목 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	3
제2절 주요 사업 내용과 모니터링 운영 방법 .....	4
제3절 기대 효과 .....	6
<b>제2장 사회적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b> .....	<b>9</b>
제1절 불안을 경험하는 대상자 특성 .....	11
제2절 불안의 원인 .....	22
제3절 불안의 영역 .....	33
<b>제3장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모니터링</b> .....	<b>53</b>
제1절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특성 .....	55
제2절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89
<b>제4장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b> .....	<b>105</b>
제1절 사각지대 발생 원인 .....	107
제2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홍보 방안 .....	120
제3절 부정수급 발생 유형 .....	127
<b>제5장 모니터링 사업의 향후 운영 방안</b> .....	<b>143</b>
제1절 포럼 주제에 관련한 제언 .....	145
제2절 2020 포럼 운영과 관련한 제언 .....	148
<b>참고문헌</b> .....	<b>151</b>
<b>부 록</b> .....	<b>153</b>

---

## 표 목차

〈표 1-1〉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 활동 기간 .....	5
〈표 1-2〉 2019년 모니터링 포럼 활동 사항 .....	6
〈표 4-1〉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 .....	107
〈표 4-2〉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 .....	108
〈표 4-3〉 부정수급 발생 유형 .....	128
〈표 4-4〉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정수급 유형 .....	129
〈표 4-5〉 부정수급 관리 체계 개선 방향 .....	130
〈표 4-6〉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제 .....	131

# 제 1 장

## 서론

제1절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주요 사업 내용과 모니터링 운영 방법

제3절 기대 효과



## 제1절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 및 기초보장제도 관련 현장 전문가를 포럼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초보장제도와 더 넓게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한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올해 사업에서 초점을 둔 주제는 세 가지로 선정하여 포럼을 운영하였으며, 세 가지 주제는 본 연구원에 있는 소득보장연구실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분야로 ‘사회적 불안’,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으로 선정하였음.

- 기초보장제도 및 사회보장제도는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낮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첫 번째 포럼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누가 불안을 느끼는지, 어느 분야에서 불안을 느끼는지, 불안을 느끼는 원인은 무엇인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이 과거와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구성하였음.

• 사회적 불안을 느끼는 영역과 그 원인, 대상 집단 등에 대한 탐색은 사회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의 영역, 사회적 위험을 느끼는 대상 집단, 사회적 위험의 원인에 대해 탐색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이자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개선 방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p. 3).

- 두 번째 주제는 기초보장제도의 장기수급자에 대한 것으로, 장기수급자 특성, 이들의 탈수급 가능성과 탈수급이 가능한 집단의 프로그램 수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럼을 구성하였음.

•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수급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기초보장제도의 탈

수급 기능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2017, p. 42). 제도의 목적이 취약계층의 빈곤 완화와 빈곤 탈출을 돕는 것인데,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가능성에 대한 진단부터, 이들의 탈수급을 도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세 번째 주제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것으로,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의 유형과 발생 원인 및 대응 방향으로 선정되었음.
-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도 사각지대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부정수급은 사회보장제도 관련 재정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최근 들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임.

## 제2절 주요 사업 내용과 모니터링 운영 방법

### □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구성과 운영

#### ○ 제7기 사회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 위촉

- 본 사업은 2008년부터 포럼을 운영하여(김태완, 전지현, 2016, p. 4), 제1기 모니터링 전문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019년에 제7기 모니터링 전문위원을 위촉하였음(〈표 1-1〉 참조).
- 전문위원 선정 대상자는 기존과 같이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과 민간 기관의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이며, 다양한 지역과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였음. 기존에 참여했던 위원 중 참여에 적극적인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외에 기존 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음.
- 7기 전문위원은 32명 규모로 구성하였으며, 2020년까지 활동을 이어 갈 예정임.

〈표 1-1〉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 활동 기간

기수	활동 기간
1기	2008~2009년
2기	2010~2011년
3기	2012~2013년
4기	2014년
5기	2015~2016년
6기	2017~2018년
7기	2019~2020년

#### □ 모니터링 포럼 운영 및 성과 보고

- 포럼 전문위원은 ‘사회적 불안’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서면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별 포럼과 워크숍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함.
- 서면과 포럼 참여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 및 현장 모니터링 결과 등을 정책 자료 등으로 구성하여 포럼의 성과를 공유함.
- 2019년 제7기 모니터링 포럼 전문위원의 구체적인 활동 사항은 아래 〈표 1-2〉에 제시함.
  - 1차 서면의견 조사와 포럼은 최근에 내방하는 상담자 중 불안을 느끼는 대상 집단이 누구인지, 불안을 느끼는 분야 및 원인은 무엇인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이 과거와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함.
  - 2차 서면의견 조사와 포럼은 장기수급자의 특성과 이들의 탈수급 가능성, 탈수급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함.
  - 3차 서면의견 조사와 포럼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의 유형,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원인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함.
  - 1차, 2차, 3차 서면의견과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이 외에 기초보장제도에서 현재 이슈가 되는 문제점 및 향후 모니터링 포럼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초보장제도와 모니터링 포럼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함.

6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표 1-2〉 2019년 모니터링 포럼 활동 사항

날짜	활동 사항
2019. 4.	제1차 서면의견 취합 - 사회적 불안
2019. 5. 21.	제1차 모니터링 포럼 실시 - 사회적 불안
2019. 6.	제2차 서면의견 취합 -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특성
2019. 7. 26.	제2차 모니터링 포럼 실시 -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특성
2019. 8.	제3차 서면의견 취합 -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에 관한 공급자 인식
2019. 9. 20.	제3차 모니터링 포럼 실시 -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에 관한 공급자 인식
2019. 12. 12.~13.	모니터링 포럼 워크숍 실시 - 기초보장제도 현안과 개선 방안

### 제3절 기대 효과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와 같이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는 실무자와 전문가를 포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위원 중심의 포럼 운영을 통해 사회보장 정책의 현장성에 근거한 제도 조정 및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은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 현장 전문가가 인식하는 복지 대상자가 느끼는 사회적 불안의 영역이나 대상 집단에 대한 논의는 향후 사회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이나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커다란 틀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갈 개선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기초보장제도의 장기수급자 특성에 대한 논의는 기초보장제도가 정책 목표로 제시하는 빈곤 탈출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근거 중심의

개선 사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부정수급과 관련한 논의는 사회보장제도에서 확대가 필요한 영역을 제시하고 부정수급 관리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 제 2 장

# 사회적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

제1절 불안을 경험하는 대상자 특성

제2절 불안의 원인

제3절 불안의 영역



# 2

## 사회적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 <<

### 제1절 불안을 경험하는 대상자 특성

■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집단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서울 광진구 (1)

○ 청년층이 가장 불안을 많이 느낌. 취업, 주거, 결혼 등 종합적인 미래에 대한 불확신에 따른 불안감이 큼.

- 학력의 높고 낮음의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명문대 졸업생들도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다양한 자격증도 갖추고 실력을 겸비한 대학 졸업생들이 많지만 취업 시장의 문이 매우 좁아 더욱 불안감을 가짐.
- 고용불안정으로 결혼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워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함.
- 완벽하지는 못해도 조금씩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하는데 취업부터 막히니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 더욱 좌절감이 큼.

#### □ 서울 광진구 (2)

○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집단은 저소득 중장년층이라고 생각됨.

- 장년 시기에 발생하는 실직, 질병 등은 경제 부활의 기회가 없어 가족들, 지인 등과의 사회관계도 소원해하게 해 고립된 생활로 이어지게 됨.
- 다른 세대(아동, 청년, 노인 등)에 비하여 공공복지가 부족하고, 사회적 관심도 떨어져 공공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종종 있음.

## 12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운둔, 대인 기피, 공격적 반항적 태도, 정신질환 등은 경제적 어려움, 소외감 등으로 인한 불안에서 기인된다고 생각됨.

### □ 서울 사회복지관

- 많은 청년이 취업 스트레스뿐 아니라 이성 관계 문제,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음(보건복지부 블로그, 2017. 7. 7.).
  - 과거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SNS의 발달로 다른 사람과 스스로 비교하거나 비교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져 청년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음(보건복지부 블로그, 2017. 7. 7.).
  - 과거에 비해 20대가 70대에 이어 연령대별 우울증 비율이 두 번째로 많고, 전체 정신과 진료 중 20~30대 환자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함(보건복지부 블로그, 2017. 7. 7.).
  - 청년들은 노년기의 우울증보다 우울증이라는 주홍글씨가 앞으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을 두려워하여 정신건강 관련한 치료를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불안정한 취업 시장과 불확실한 미래, 경쟁 구조 속에서 청년들의 불안한 마음은 불안한 사회로까지 연결됨.

### □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

- 청년과 노인 집단이라고 생각함.
  - 청년은 요즘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있어 일자리가 없어서 가장 불안한 집단임.
  - 노인은 장수로 은퇴 후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노년 빈곤이 문제여서 불안한 집단임.

### □ 경기 광명시

- 공적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임.

- 경제적, 심리적 어려운 상황에 공적 서비스의 지원이 어렵다면 의지할 곳이 없어 불안이 커지게 됨.

#### □ 경기 노인복지관

-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난의 대물림이 지속되는 집단(저소득 가정, 한부모 세대)임.
  - 부유한 계층에서는 고비용의 사교육과 많은 교육 혜택 및 넓은 인맥으로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
  - 하지만 가난이 대물림되는 집단은 부모의 부재 및 기회와 가능성의 제한으로 노력에 비례하여 그에 따른 결과에 낙심하거나 사회문제의 악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임.

#### □ 경기 자활센터

- 청년 집단이 해당됨.
  - 그 이유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높은 대학 진학률, 이로 인한 사회 첫 발의 마이너스 시작, 취업의 눈높이 상승, 산업 발전의 일자리 감소, 사회정책 대상의 배제 등으로 인함.

#### □ 인천 서구

- 5060세대, 곧 신중년층과 청년층이라고 생각됨.
- 신중년층의 불안감은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 자신의 노후 설계 등 세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중복적 불안이 있음.
  - 사회적으로 고용불안과 경쟁력 약화,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후 자금 준비 등 가장으로서 개인으로서 현재의 소득이 미래의 삶을 결정하고 질병이나 소득 상실은 노후 빈곤계층으로의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실감함.
- 또한 이 세대의 자녀들은 대부분 1990~2000년생으로 청년층임.

14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청년들의 취업난으로 인한 파생적인 문제, 즉 3포(결혼, 자녀 출산, 주거 구입 포기) 문제는 신중년층이 현재 활동하는 소득의 일부가 미취업 청년 자녀들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되기에 이중적인 불안(자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으로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크다고 봄.

□ 인천 부평구

○ 중위소득 60~80% 정도의 가구임.

-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아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 및 재산 등이 넉넉하지 못해서 늘 부족한 상태의 생활을 하고 있음.
- 가족의 실직, 질병 등으로 가구의 경제적 상황, 행복도 등이 가장 많이 변화될 수 있는 가족 형태임.

□ 인천 자활센터

○ 차상위계층 및 경증 장애인, 노인 독거 가구, 한부모 가구(부자 가구) 등임.

□ 광주 광산구

○ 저소득층(수급 부적합 대상자인 차상위계층 포함)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은 부양의무자들과 가족관계 단절도 아닌 상황에서 생활비나 금전적인 도움이 없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을 경우, 사회를 비난하며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함.
- 저소득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삶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회불안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음.
-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경제적 여건이 불리해졌지만 기초보장제도의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여 국가와 사회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계층의 경우, 기초보장제도의 요건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을 수 없다는 제도 자체의 한계 탓도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를 겪은 계층들은 사회적 낙인이나 자존감의 문제 등으로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하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음.

○ 저소득 1인 가구(독거노인 등)

- 주변 가족이나 이웃의 왕래 없이 혼자 지내는 저소득 1인 가구는 위험에 노출됐을 때 대처가 늦으며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냄.

○ 불안정한 일자리 및 주거 취약계층

-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사람들은 대부분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지내며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로 일정한 소득이 없음.
-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안정되고자 하는 욕구인데 불안정한 일자리, 취약한 주거환경 등에서는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움.

○ 청소년, 청장년 집단

- 청년의 경우 취업 어려움이 큰 문제이며, 취직이 잘 안되거나 쉬운 일을 찾으려고 하고 가출이나 안 좋은 길로 빠질 우려가 큼.
- 저소득 가정의 청장년의 경우 취업난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일시적이거나 가정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힘들.

○ 노인

- 삶 전반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됨.
- 의료 기술의 발전과 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후가 불안한 노인세대로, 노후 준비도 미비함.
-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자리가 없고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워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듯함.
- 노인성 질환과 장애를 지닌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 친척, 사회에서 격리되어 홀로 떨어져 살다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졌을 때 연락할 가족도 없고 돌봐 줄 이웃이 없어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한 죽음에 이를 수 있음.

- 근로능력이 없는(노인, 장애인, 근로능력 없음 판정 대상자 등) 취약계층
  - 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기존에 보장받고 있는 부분에 변동(급여 감소, 자격 중지 등)이 생기는 경우, 취약계층은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거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원처를 찾지 못했을 때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 장애인, 어린이, 노인의 경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음.
- 한부모 가정
  - 민원대에 있다 보면 가장 예민한 집단이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정인데, 그만큼 생계 등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커서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음.
  - 한부모 여성 가정의 경우 아이 돌봄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소득이 불안정해서 기초생활(주거, 교육 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음.
  - 양육 및 구직 스트레스로 만성질환 또는 중증 질환(암 등)을 얻어 더 심각한 고용불안과 양육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장애인 가정
  - 현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대상자들인 장애인은 너무 많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기대함. 예를 들어, 발달재활서비스 같은 경우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대기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며 항상 불만을 제기하며 매사에 부정적임.
  - 장애 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과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들. 또한 장애 등급이 낮을 경우 실제 불편이 크더라도 활동 보조를 받지 못함.
  - 장애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큼. 약물이나 활동 보조기기(전동휠체어 등) 등의 비용은 물론 보호자가 필요하여 본인과 보호자 둘 다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장애는 완화되거나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어서 대부분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같이 느낌.

○ 가정폭력 피해를 받고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 특히 아동과 장애인은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함.

○ 결혼이주 다문화 세대 가구주

- 한국에 정착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위자료를 받지 못한 채 이혼을 당하거나 국적을 취득할지라도 언어가 미숙해 여러 정보에 취약하고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서비스직업군

- 고객(민원인)이 받기를 원하는 친절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나 강도가 증가하고 있음.

□ 강원 자활센터

○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이 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집단임.

-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쉽지만 폐업은 쉽지 않음.
  - 많은 사람이 자영업을 쉽게 선택하는 이유는 이외에 별다른 생계유지 수단이 없기 때문임.
  - 이런 부담을 갖고도 창업을 하였지만,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 대비 10.2%포인트 높은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퇴직금도 없는 자영업자가 의지할 곳은 '빚' 뿐임.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302조 1000억 원)은 2월 이후 5개월 연속 2조 원 이상 증가함(매경이코노미, 2018. 8. 3.).
-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왜 이리 힘든 것일까 생각해 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6만 300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으며, 자영업 시장의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임

(매경이코노미, 2018. 8. 3.).

- 또한 사업 실패 이후 재기가 쉽지 않으며, 빚을 갚는 것도 어려워 점점 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근로 의욕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충남 서천군

- 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집단은 ① 빈곤과 함께 장애, 알코올중독, 조현병 등 정신과적 질병자, 보호자가 없는 중증 질병자(사회적 환경과 본인 의지 미약, 질병 등으로 삶의 변화가 어려운 계층, 자활 불가능한 대상), ② 사회부적응자, 취업하지 못한 취업준비생, 취업 포기자, 여기에 자포자기한 계층, ③ 삶의 의욕과 노력이 부족하고 본인 및 주변 사람을 어렵고 불안하게 하는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들임.
- 그 이유는 질병적인(인지능력, 성격, 성향 포함) 문제와 사회부적응, 질병에 대한 부실한 사회적 보호막 때문임.
- 참고로 농촌은 노인 인구 증가 및 청장년층 감소로, 청장년 문제는 도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음(농촌은 실업보다는 저임금의 일손 부족이 문제임).

□ 충남 연구기관

- 차상위계층
  - 복지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임.
-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예비 노년층
  - 복지 대상이 아닌 보편적 국민도 노후 준비는 부족함.
  - 길어지는 노후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대한 불안이 존재함.
  -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부동산 가치의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큼.
  - 기존 세대의 노인과 달라 사회적 공헌 등의 기회와 실비 지급 등의 방안이 필요함.
- 위기 가정: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 위기 가정

- 복지서비스나 정책을 몰라 동반자살 등 극단적 방법을 선택함.

#### □ 경북 안동시

##### ○ 준비가 안 된 노후생활 세대

- 노인세대는 1940년~50대 세대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못살고 어려운 시기에 먹고살기에도 바쁘고 6.25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파폐한 관계로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보릿고개라는 시대에 어렵게 삶.

#### □ 경남 산청군

##### ○ 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집단은 여성(여성 본인과 아동, 특히 딸이 있는 여성)이라고 생각함.

-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조현병 등 질병으로 인해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다거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언제 어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여성들에게 내재되어 있음.
  - 신체적으로 약해 보이는 집단인 여성이나 아동이 그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임. 일상생활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트라우마가 내재되어 있어 간혹 뒤 돌아보거나, 소음이 들려도 크게 놀라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언론 보도의 영향도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언론에서 사건의 전말 등을 너무 상세하게 보도하고 얼굴을 공개하기도 해, 빈곤한 사람처럼 보이거나 언론에 공개된 얼굴과 비슷한 생김의 타인을 보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상해를 입거나 살인 사건의 피해를 당하는 다수가 여성이거나 아동으로 밝혀져 불안감은 더욱 가중됨.
- 출산율 저하로 아동 수는 감소하는데, 아동 성폭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딸이 있는 여성은 이중 불안(여성으로서의 불안, 딸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음.

- 아동(딸)이 있는 여성의 경우 딸이 학교, 길거리, 학원 등에서 온갖 위험(성폭행, 성희롱, 언어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불안감이 있음.
-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딸이 그런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불합리함과 억울함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함.
- 여성 성폭행, 아동 성폭행, 가정폭력 등 범죄에 대하여 법이 너무 관대하여 불안을 더욱 가중시킴.
- 또한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여성 사회복지사의 경우도 민원인으로부터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음.

#### □ 경남 의령군

- 개인이나 가족 등 나아지리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는 층임.
  - 가족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있는 의료비 지출 과다 가구, 근로능력 상실로 기본소득이 적어 궁핍하게 사는 상대적 빈곤 가구, 장기간 미취업 청년 가구, 소득 격차 가구, 중도 퇴직자 등.
- 사회가 고도화 다양화 다원화 전문화된 상태에서 그 사유 또한 계층 및 집단으로 한정 짓기에는 불안의 사유가 광범위함.
  - 경제적 측면에서는 소득 격차로 인한 박탈감 지속 가구 또는 개인, 의료적 측면에서는 희망이 없는 장기간 부양 가구 또는 개인, 사회적 측면에서는 장기간 청장년 실업, 기본소득이 부족한 노인세대 등이 있을 수 있음.

#### □ 전북 군산시

- 가장 불안한 집단은 50대 독거 남성임.
- 그 이유는 최근 혼자 지내다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고 있으며, 그중 50대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높음.
  - 최근 5년(2014~2018년) 무연고 사망자가 8173명에 달하고, 이 중 50대 사망자가 1968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24%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56%를 차지하고 있음.

□ 전북 장수군

- 여성들 대부분 범죄 피해에 대한 일상적인 불안감이 큰 상태임.
  - 묻지마 범죄가 주로 여성을 상대로 일어나기 때문임.
- 청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자립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함.
  - 노력만으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상황임.
  - 7포 세대라는 사회적 언어가 통용될 정도로 불안을 경험하는 집단임(7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

□ 제주 제주시 화북동

- 세대 내 조현병,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 혹은 그 이웃이 불안 집단임.
  - 최근 연일해서 방송 등 매체를 통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는 대상자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살해 혹은 부상을 내는 뉴스가 전해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서도 정신질환자들을 상담할 때가 제일 고민스럽고 두렵기도 한 것이 사실임. 과연 내가 그들을 상담할 때 내 신변은 괜찮을까 혹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우리 동네에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우리 동네에서 마음을 놓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을지, 늦게 귀가할 때면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불안감을 경험함.
  - 이러한 불안감은 사무실이나 지인들과의 대화의 주제로도 자주 언급됨.

## 제2절 불안의 원인

■ 사회정책이 발전 중임에도 사람들이 생활 불안을 느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서울 광진구 (1)

- 청년들의 취업, 주거, 결혼에 대한 불안감은 사회정책과 현실의 괴리감이 크기 때문임.
  -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책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권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매우 낮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낌.
  - 거기에 추가로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여서 쉽게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함.
- 아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내다 보면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만 감.

### □ 서울 광진구 (2)

- 사회적 불안 원인 중 빈곤이 빈도가 높다고 생각하며, 사회정책 발전에도 사람들이 생활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 상대적 빈곤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됨.

### □ 서울 사회복지관

- 사회정책이 발전 중이지만, 정작 자신에게 그 정책의 실효성이 발휘되지 못한다면, 똑같은 현실 속에 좌절하게 마련임.
- 특히 청년세대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통해 고용을 창출해야 할 세대인데, 사회적 고용불안은 지속적인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
  - 비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사회, 첫 직장부터 불안한 위치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임. 청년층의 경우 첫 직장 시작부터 불안정한 근로 조건에 놓이게 되며, 소득불평등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어 그들의 삶에서 생활 불안이 떨쳐지지 않는 것임.

-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안은 사회불안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

- 청년과 노인세대들의 빈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이는 노동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해서라고 생각됨.

#### □ 경기 고양시

-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사회문제는 노인 빈곤과 청년 실업임.
  - 특히 청년세대가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음.
- 불안은 어떠한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의 실체와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더욱 증대하게 됨.
  - 이러한 측면에서 전후 노인세대들은 이미 극심한 가난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 앞으로 겪게 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은 어느 정도 그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었음.
  - 반면,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개인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겪어 보지 못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급속한 사회 발달에 따른 변화에서 낙오되는 불안감, 주변 또래들의 취업 등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음.
  - 노인의 경우도 그전에는 겪지 못했던 개인의 건강 악화나 노령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불안함이 더욱 커질 수 있음.
  - 그러나 개인적인 신체 조건을 등을 제외한 집단적 측면에서는 청년세대의 불안함이 더욱 클 것임.

□ 경기 광명시

○ 빈곤의 가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임.

-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상의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는 삶의 방식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은 스스로가 빈곤하다고 느끼고, 따라서 생활 불안을 느끼는 것임.

□ 경기 노인복지관

○ 가난은 사회구조의 문제이며, 그 안에서 악순환이 만들어지기 때문임.

- 경제 구조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악화됨.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사교육이 만연하면서 1980, 1990년대처럼 '개천에서 용 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중앙일보, 2019. 1. 30.).
-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은 도를 넘어 이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모든 사회적 병리 현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중앙일보, 2019. 1. 30.).

□ 경기 자활센터

- 한 사회의 물질적인 삶의 조건이 생각과 의식을 결정하듯, 언론, 매스컴을 통해 비추어진 사회적 분위기에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대한민국의 사회정책이 발전한다고 하여도, 사회정책의 기본적 철학은 사후적, 잔여적 가치관이 뚜렷하다고 생각함.

□ 인천 서구

- 질병, 소득 상실 등 경제적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이 원인임.
- 기본욕구의 불충족, 가정해체와 자녀들의 취업난 등 제도권과 각 사회적 수당 등에서 벗어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임.

- 사회정책의 범주 안에 진입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유(부양의무자 기준, 가구 단위 지원 등)는 상대적으로 생활 불안과 불만을 야기해 복지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무너뜨림.

○ 정보의 비대칭성도 문제임.

- 각종 수당과 사회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개인의 불안감을 증대시킴.

□ 인천 부평구

- 복지서비스가 저소득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음.
- 20~30대는 일자리는 많지만 3D업종을 하려고 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지해서 생활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마스크, SNS를 통해 부자에 대한 열망과 부자가 될 수 없음으로 인한 자괴감에 빠지게 됨.

□ 인천 자활센터

- 불안정한 일자리로 매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임.
  -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음.

□ 광주 광산구

- 사회 변화 속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함에 대한 소외감 때문이라고 생각됨.
  - 마스크와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양극화에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야기함.
  - 고용안정성(정규직/ 비정규직 등)과 소득의 차이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주변과 소외감을 느낌.
  - 경제적 성장으로 사회정책이 발전하고 빈곤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큼.

○ 소득 분포의 양극화와 불평등화가 원인임.

- 소득 양극화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추이가 비울적으로 가장 많은 중산층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됨.
- 취업의 어려움과 물가의 끊임없는 상승, 아파트 등 부동산 자가 마련의 어려움이 존재함.

○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정신질환 또한 많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생활에 불안을 느낄 수 있음.

○ 사회정책은 발전 중이지만 발전하는 속도는 더디고 사회정책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본권에는 한계가 있음.

- 사회보장법이 사람들이 생활 불안을 느끼는 현실적 문제를 보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현실적인 문제에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선정 기준(최저임금 인상애 따른 소득 기준 초과)과 가처분소득이 적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음.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활 기준만 보장하는 보충급여의 특징 때문에 여가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대다수가 느끼고 있기 때문임.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보다 기존과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많고 생활물가의 상승을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음. 즉, 복지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물가는 생각보다 높아 실제 최저생활선을 보장해 주지 못함.
-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이,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액이 적다고 불평을 함.

○ 노인에게 치우친 정책, 그리고 보편복지의 확대보다 선별적 대상에 대한 혜택이 더 늘어나는 추세임.

-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 위주의 지원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어, 4-6급은 소외됨.

- 중증장애인(1-3급) 위주로 대부분의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중증이 아니어도 장애의 종류에 따라 물품 지원이나 활동 보조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해야 함. 예를 들어 상지 2급의 장애인은 기저귀 등의 물품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나 하지 4급의 장애인은 기저귀 등의 물품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물품 지원의 경우 기저귀 등의 양을, 활동 보조 등의 서비스는 시간이나 대상자를 확대해야 함.

○ 양적으로만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함.

- 정책의 효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하기 어려움.
-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고 하나, 아직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일자리는 있으나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악덕 기업이 많기 때문임.
-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폭력 발생 시 신고해야 하는 점), 폭력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피신처나 보호처 수준이 높지 않음.
- 출산율과 혼인율이 최저인 시대에서 육아정책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그러한 정책들이 있음에도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고 달라진 사고와 생활에 맞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책들이 나와야 함.

○ 사고가 일어난 후에 뒤늦게 만들어지는 안전 관련 정책이 많아 정책 불신으로 이어짐.

○ 사회정책 자체만으로는 완전히 경제적 불안을 없앨 수 없음.

-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지나 주변인들의 관심과 지지 또한 필요함.
- 민간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이 발전하여 대상자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주변인들이 사회 취약계층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접할 기회가 많은 사람은 알고 혜택을 누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정책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지 못함.

-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에 대한 부정확하고 과한 홍보가 문제일 수 있음. 예를 들면 기초연금의 경우 정부에서 홍보했을 때는 기초연금수급자들은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며 복지국가로 정부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을 발표하였으나, 실상은 국민연금 비수급자거나 소득인정액이 5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되었음. 이런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노인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정부를 원망함.

○ 그동안 사회정책이나 복지제도들이 약자의 입장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보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정책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 많은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들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형편을 토로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받으러 왔을 때 각종 조건과 자격을 검증하여야 하는 시스템 앞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의 정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사회정책을 발전시키는 주된 대상이 민원이나 그에 대응하는 민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과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임.

-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정책만 강조하여 펼치다 보니, 그 업무를 하는 자의 안전이나 업무량, 강도, 자존감 등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발전이 더딤.
- 일례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적 행정 신고센터가 개설되어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준다는데, 일선에 있는 업무 담당자들은 소극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을뿐더러 적극 행정을 펼쳤다가 나중에 감사에서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고, 소극적 행정이라며 담당자의 소속과 이름을 알려 달라 하면서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함.

#### □ 강원 자활센터

○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 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보완되고 있지만 국민적 욕구와 희망이 커지고 있음.

○ 경제 영역에서 대다수 국민이 경쟁에 내몰리면서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실직, 가계 부채, 부실한 노후 준비 등 개인적 차원의 불안 요인과 경기 침체 및 성장 둔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있다고 판단됨.

#### □ 충남 서천군

- 사회복지 발전은 성공 가능 계층에 초점이 있고,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문제 및 과제 책무에 대해서 비교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함.
- 노인복지는 보편적 복지까지 확대되어(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지하철 무료 승차 등) 다각적으로 보호 체계가 이루어졌으나, 장애인복지는 주간보호나 요양, 활동 지원에 그치고, 장애인일자리도 극히 일부의 사람만 혜택을 받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 및 회복 불가능한 알코올중독 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주변인과 본인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음. 복지 대상자 및 수혜의 증가로 생계 문제는 다소 해소된 상태로 단순 수혜가 아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사례 1) 부친이 정신과적 망상이 있고 부인은 지적장애가 있으면 그 자녀는 교육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 이 경우 복지 분야 접근보다는 더 전문적인 정신과적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데 진료는 선택 사항으로 본인이 진료 등을 거부하면 강제성이 없어 이 가구는 계속적으로 사례관리와 관심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효율성은 떨어짐.
  - 사례 2) 남편은 무신, 알코올중독, 배우자 알코올중독, 가족 폭력이 있으며, 자녀 2명인 가구임. 빈곤과 알코올, 폭력으로 배우자의 가출이 반복되고 자녀 교육에 문제가 많음. 삶의 의욕 상실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했으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알코올중독화된 생활로 자녀들도 상당히 불안한 가구임.

#### □ 충남 연구기관

- 제도는 있으나 걱정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함.

- 또한 제도 및 서비스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삶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는 산업구조임.
- 소득 창출과 복지 지출이 선순환되지 않는 사회구조임.
- 위기 가정의 경우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없고 정보 접근성도 낮음.
  - 기존의 복지 대상자는 복지서비스를 찾아다니는 정도에 이르렀음. 보편적인 '기초연금' 등 서비스에 대해선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함.
  - 하지만 복지서비스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없는 위기 가정의 경우 개인적인 경제 및 자녀 양육 등 어려움이 발생해도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함.
  - 돈이 필요하면 은행을 찾고, 병이 나면 병원을 찾듯이 복지적인 문제에 대해 신뢰하고 담당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경북 안동시

- 우리나라에서 특히 도시 지역은 엄청난 주거비 부담으로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 집 마련과 주거비 세 부담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음.
- 어려운 세대는 많고 정책적인 뒷받침은 부족한 데에서 생활 불안이 나타남.

□ 경남 산청군

- 사회정책은 일부 집단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감소시켜 줄 수 있음.
  - 다만, 노인 인구에 대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으로 일부 집단에 지나지 않음.
  - 어느 집단이든 경제적인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생활의 불안을 느낀다고 생각함.
  - 기본적인 생활에서의 주거비, 생활비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집단(미취업자, 취업준비생 등)인 경우 불안감이 가중됨.

- 사무직이나 관리직 등을 선호하고 생산직은 기피하는 사회현상, 직업 간 임금 격차나 노후 대책 미비, 선호 직종에 따라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생활 불안의 원인이 됨.
- 또 경제적인 부분 외에는 여성이나 아동이 당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언어폭력 등에서 법적인 부분이 너무 관대한 현실로 인해 불안감이 높음.
- 알코올중독, 혹은 조현병 등이 의심되는 사람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의무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체계가 있어야 생활 불안이 덜어질 것이라고 생각함.
- 일명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등 잠재적인 사회문제 요인이 있는 유형(집단)에 대한 예방적 복지정책이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회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예방적 복지 시책, 즉 금품 지원이 아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회정책이 필요함.

#### □ 경남 의령군

- 사회정책이 발전한다고 해도 개인의 사회적 박탈감, 사회적 일탈, 개인주의 사고방식으로 한계에 도달한 불만,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원인임.
  - 특히 정신건강복지법이 있어도, 향후 사법기관 입원(지역사회 재활) 등이 제도적으로 있어도 정신적 일탈, 사회적 불만이나 욕구 분출을 의료, 복지, 사법 등이 통합적으로 촘촘하게 못 챙기면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임.
  - 소득 위주의 경제성장으로 50년 이상 국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지열발전이 원인이 된 지진, 태풍, 산불, 풍수해를 비롯한 자연재해 등의 문제가 있음.
  - 세월호 참사, 항공·철도·선박·교량 사고 등으로 제조, 기술이 우대받지 못하는 사회임.

□ 전북 군산시

-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실직과 가족해체 등이 주요 원인임.
  - 열악한 주거환경(고시원, 원룸, 쪽방 등)과 장기 실직에 따른 경제적인 빈곤, 이혼이나 미혼 등으로 찾아올 가족도 없고 그로 인해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은 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더욱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음.
- 독거 가구의 파악과 직장을 잃은 대상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고, 가족해체에 따른 고립을 막기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필요함.

□ 전북 장수군

- 여성 안심 귀갓길, 범죄 예방 환경 인프라 구축, 범죄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방범 순찰 등 치안이 강화되고 있지만 힘이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
- 빈부 격차, 소득불평등에서 오는 불안감이 존재함.
  - 복지정책 등에서 높은 개인 부담금, 제한적 이용 등의 문제가 남아 있음.

□ 제주 제주시

- 개인 인권 강화 및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은 쉽지 않음.
  - 또한 질환 특성상 본인이 이를 인지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음.
- 성범죄자는 신상공개제도 등이 있어 우리 동네 성범죄자인 경우 별도 안내문이 집으로 통보되지만,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는 병력과 범죄 기록 등의 정보를 알 길이 없음.
  - 그리고 대상자의 질환 특성상 충동행동 등으로 예측이 불가능해 사람들이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것임.

### 제3절 불안의 영역

■ 최근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의 주된 욕구 또는 문제 영역이 무엇입니까?

#### □ 서울 광진구 (1)

- 정신질환자 지원에 대한 상담이 많음. 언론 등을 통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
  - 정신질환자 가족뿐 아니라 건물 임대인 및 주변 지인들의 상담이 많아짐.
  -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청장년 1인 가구의 입원 절차가 어려워져 주변의 불안감이 더욱 증가함. 부모가 사망하고 형제들과 왕래 없이 지내는 정신질환을 가진 1인 청장년 가구는 본인 동의 없이는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가 어려운 상황임. 질병 상태가 심각해도 본인 동의가 없는 경우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 의뢰도 진행되지 않아 상태가 더욱 심해짐.
  - 강제 입원이 어려워 장시간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고 주민들은 불안감을 공공기관에 호소하고 공공기관은 별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음.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됨.

#### □ 서울 광진구 (2)

- 주민센터 복지 민원의 주된 욕구는 경제적 어려움이 기본임(생계, 의료, 주거 등).
  - 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욕구는 주거(공공임대주택 등) 문제 해결임.
- 상담자의 입장에서 문제 영역은 정신건강 문제임.
  -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주변 주민이 느끼는 불안으로 반복 민원이 발생하나(조현병, 집착, 알코올중독 등) 당사자는 병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퇴원 후 보복을 두려워하는 가족의 입원 동의 거부, 자신과 타인의 위해 등을 판단할 근거 미약 또는 추후 인권 문제로 인한 분쟁 소지 등으로 자치단체장의 입원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서울 사회복지관

- 최근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의 주된 욕구는 정신건강 영역과 경제적 영역임.
  -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건은 주변인의 상담 의뢰가 오는 경우가 많음.
  - 경제적 영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주변인의 의뢰로 오는 경우가 많음.

□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

- 기관의 특성상 가장 많은 상담은 학대 문제인데 그중에도 가정의 경제적 문제가 많음.
  - 아이들 방치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신체학대 등의 폭행도 경제적 어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기 고양시

- 물질적,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대 사회의 평범한 시민은 불과 100~200여 년 전의 최상위계층 권력층보다도 여러 측면에서 진전된 생활을 누리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회발전에도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큰 이유가 됨.
  - 본인 스스로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가도, 더욱 화려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본인의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최소한의 기초생활은 보장하고 있음.
    - 법정 기준에 의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실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양한 경로의 지원을 통해 생계를 이어 갈 수 있음.
  - 그러나 현대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된다 하여 불안에서 벗어나지는 못함.
    - 과도한 빈부 격차로 인한 생활상의 차이, 그리고 그것이 결과의 차이가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 등 기회의 차이로까지 확대될 때 겪게 되는 불안은 더 커지게 됨.

#### □ 경기 고양시

- 기초연금, 생계급여 이외에 노인들의 추가 소득 확보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음.
  -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으로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공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의료비 등 추가 지출 요인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감이 많이 발견됨.
  - 1인 가구 증가와 가정해체 등으로 과거 가구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던 노인 세대들이 스스로를 돌보아야 하고, 급변하는 생활환경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

#### □ 경기 광명시

- 정신적 문제, 돌봄의 문제임.
  - 각종 사회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외 돌봄 소외계층이 발생하고 있음. (독거 중장년의 알코올 의존으로 야기된 돌봄 등)

#### □ 경기 노인복지관

- 노인 상담(경제, 건강, 재산, 가족, 성 상담 등) 영역임.
  - 어르신 상담에서 빠질 수 없는 화두는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임. 이러한 문제는 욕구로 표현되면, 세분화되어서 말벗 및 건강한 이성교제, 소통하는 이야기 대화법에 대한 상담임.
  - 더불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도 특히 노인 성 관련 질병 및 노인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담 및 교육의 영역이 협소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어르신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음.

□ 경기 자활센터

○ 자활사업 참여 주민의 자녀 상담이 많음.

-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학자금 대출 상환과 취업, 본인의 수급권 유지 여부에 대한 상담임.

□ 인천 서구

○ 소득 상실로 인한 일자리 지원, 정부 부조 정책 정보 제공, 생계 지원, 질병(특히 발달장애, 정신장애, 불안, 우울증 호소)이 많이 들어옴.

○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현재까지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증가함.

- 근로무능력자,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희망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연계 요청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이들은 대부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대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가구원 중 일부의 일용소득이나 재산환산액 등이 진입을 막고 있음(예, 차량 소지자 재산환산액 100% 반영).
- 소득, 재산환산액에 대한 정비가 요구됨.

□ 인천 부평구

○ 주거 영역에서는 전세/월세 등이 비싸서 집을 구하기 힘들.

○ 40~60대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일자리 찾기가 어려움(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김).

○ 65세 이상 연금 대상자의 경우, 왜 연금을 30만 원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음.

○ 정신질환자 가족의 경우, 가족에 대한 돌봄이 되지 않아 복지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함.

○ 이혼한 여성 민원인의 경우,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함.

## □ 인천 자활센터

- 주된 욕구는 안정적인 일자리임(이와 관련 구직 능력 및 직업 능력 제고, 자격증 취득 연계 등 포함).

## □ 광주 광산구

- 일상적으로 듣게 되는 주된 민원 사항은 복지제도의 형평성에 제기되는 의문임.
  - 본인보다 더 형편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자신은 그러지 못한다는 불평 사항이 많음.
  - 사회정책이 발전하더라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발전하는 사회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불안한 생활을 그대로 유지함.
- 복지 민원의 주된 욕구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상황 관련이 대부분임.
  - 젊은 층에서부터 노인층까지 전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상담의 욕구임.
  -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그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기준과 격차가 커 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 버리는 게 낫지”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음.
  - 가계 부채 및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가정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이 있음.
  - 연금과 같은 안정된 공적 이전 소득원, 돌봄 서비스 같은 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담 많이 들어옴.
  - 보편적 복지(기초연금 등)에서 제외되었을 때 민원이 들어옴. 기초연금 인상분에 대한 문의도 들어옴. 다들 30만 원 준다는데 왜 본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큼.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를 작년 10월부터 하였기 때문에 다른 급여(생계, 의료)에 대한 부양의무자 관련 문의도 많음.
  - 현재 재산은 상당히 보유 중이나 용통이 불가하여 생계에 필요한 현금성 급여 복지를 원하는 상담이 많음.

- 노인 등 약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거나 한정된 선정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달라는 부분임.
  - 청장년층부터 노인층까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담은 '일자리' 관련 영역이며, 노인들의 경우 노인일자리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싶어 하며, 청장년층의 경우 취업, 고용 문제가 상담의 주요 내용을 차지함.
  - 노년기에는 적은 소득이라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함. 노인이 되어도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나 일자리 수에 비해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사람은 소수의 저소득층임.
  - 장애 정도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임. 장애 가구의 경우 본인은 물론 보호자까지 간병을 하느라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경제적 빈곤에 매우 취약함. 장애 수당 및 연금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함. 따라서 장애 가구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함.
  -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이유로 일반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고, 혹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나 자활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맘에 들지 않는 다거나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유아무야 노동을 하는 척만 하려는 수급자 및 대상자가 늘고 있음.
-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이나 보증금 지원 문의가 들어옴.
  - 각종 방송에서 집수리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이 스토리로 홍보가 많이 돼서 우리 집 좀 치워 달라는 등 지나치고 불필요한 복지 욕구가 심해졌음.
- 대인관계 갈등, 예컨대 층간소음, 악취, 본인 정서불안 등에 대한 상담이 들어옴.
  - 말동무가 필요하고, 가족들도 자주 찾아오지 않아 어렵다고 함.
- 예전보다 이혼율이 높아져서인지 한부모 가족 상담이 많이 들어옴.
  - 이혼 가정 중에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한 명의 소득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음.

-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어려움, 저소득층 교육비 지출 관련 경제적 부담을 호소함.

#### □ 강원 자활센터

- 1순위는 심리상담임.
  - 심리적 불안과 우울, 불면, 삶의 의미 부재, 알코올 관리에 대한 상담임.
  - 병원 연계가 증가하나, 병원 치료에 개입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함.
  - 알코올성 문제를 가진 분들은 중독 관리,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에 연계하여도 만성적인 경우가 많아 복지 지원의 효과성이 매우 떨어짐. 이는 결근 증가, 사업단 공동체성 형성의 어려움, 참여자 간의 불화로 이어져 자활이라는 목적 실현이 어려운 한계가 발생함.
- 2순위는 긴급지원임.
  - 병원, 집 문제 등 목돈이 필요할 경우가 있음.
- 3순위는 주거 지원임.
  - 현재 여관에 사시는 분들이 있음.
- 4순위는 치아 지원임.
  - 40대부터 치아가 없는 경우 많아 취업 이미지 문제 등 자활에 어려움이 많고, 조기치매 문제가 발생하며, 소화불량의 어려움이 발생함.
  - 40대부터 치아 지원이 필요함(200명 중 30명이 넘음). 영양 상태가 나빠져, 임플란트도 어렵기 때문임.
- 기타 상담으로는 재무(파산, 면책 신청), 생활 지원(이사), 의료비(비급여 부분), 자활 일자리의 지속적 참여 등이 있음.

#### □ 충남 서천군

- 농촌 지역으로 자녀들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홀로 생활하는 단독가구가 늘어가면서, 적절한 관리가 안 되는 대상자-치매 환자, 고령의 질병자, 음주생활을

하는 중장년층-가 마을 내에서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대상임.

- 이 경우 각 읍면에서 사례관리와 관심 대상으로 관리되어도 생활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마을에서는 보호 지원을 희망하고 가족들은 먼 곳에 있어 관심도가 떨어짐. 관에서 관리하다 보니 자녀들 관심은 더 떨어지는 상황으로 대상자 본인의 의지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복지 혜택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
- 사례관리 이후 본인 또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분야(건강, 집수리, 의식주 등)도 관에 의지하고 혜택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짐. 부양의무 의식이 감소하고 관 주도 혜택 욕구가 증가함.
- 예를 들어, 본인 부모가 주거급여 대상으로 신청했는데 요양시설 입소를 했는데도 자녀들이 주거급여 대상으로 집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긴급의료비와 관련하여 무릎관절수술일 때 통장 잔액 정리 등을 미리 하여 자녀들과 수술비를 신청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인 팔순의 노모 집이 무너져 가는데도 자녀들이 집수리 등을 하지 않고 관이나 후원 등을 통해 집을 신축할 생각으로 문의하는 경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발적으로 도배하고 장판을 깔기보다 관의 지원이나 후원을 기다리는 경우가 다수임.

#### □ 충남 연구기관

##### ○ 예비 성인 장애인(장애인 자녀 돌봄 문제)

- 성인이 되면서 재활 및 치료 사회서비스 이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 재활 및 치료 사회서비스 이용 비용이 부담됨.
- 지역 내 기초적인 필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부족함.

##### ○ 치매 가족원(치매 환자 돌봄, 가족원 일상생활 유지)

- 치매 환자 가족의 삶의 질, 장기화되는 치매 가족원의 돌봄 문제가 존재함.
- 치매환자와 함께 거주하되 가족원의 일상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욕구가 있음.
- 그러나 문제 발생 시 개인이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봐 가며 정보를 얻어야

하는 현실, 일과별로 지원되는 서비스가 없는 한계가 존재함.

#### □ 경북 안동시

- 가족해체의 위기, 즉 가장의 실직 및 부부 가정의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 또한 사업 실패로 인한 가족해체 위기, 부도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 □ 경남 산청군

-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연하는 경우가 많음.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의 경우 자녀의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되어 수급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실제 자녀는 월 생계급여만큼의 경제적인 지원이 없으며, 1년에 2~3회 정도 주는 용돈이 지원의 전부인 경우가 많아 부모인 수급권자는 실제 본인이 생활하기 어려우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해 달라는 경우가 많음.
  - 또한 국민연금수급액이 기초생활수급에서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는데 이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어르신이 다수 있음. 즉 예전에 본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한 만큼 현재 연금을 받는 것일 뿐인데, 그것마저도 소득으로 산정한다는 것에 불만이 있음.
-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해체 사유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많음.

#### □ 경남 의령군

- 1순위: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수급 생계비를 차감하는 등 소득이 적어 힘들어하는 가구 문제.
- 2순위: 부모의 이혼, 사망 등으로 조부모가 양육하는 세대.
- 3순위: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차상위 특별취로(경남만 시행) 등 저소득일자리 인건비 및 선정 문제.

- 4순위: 다문화 가족 이혼, 자녀 양육, 질병 등 사회 일탈 문제(가정폭력, 자녀 방임 등).
- 5순위: 정신질환자 문제. 인구주택조사(5년마다)를 하듯 운전면허, 병역 신검, 주민등록 최초 발급 시 진단이 필요함. 전 국민 정신건강조사 필요함.

□ 전북 군산시

- 노인 및 장애인 가구 돌봄 서비스와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음.
- 현행 지원 제도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서비스(반찬 배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관과 부서에서 각각 행해지고 있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하는 것이 관건임.
  -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동안 보호를 받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사회화하여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 복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서비스 품질이 높은 다양한 제공 기관의 지정이 확대되어야 함(2019년 3월부터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추진 중임).

□ 전북 장수군

-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박탈감임.
  -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과 비교되고 있으며, 정책이나 제도의 혜택을 상대방에 비해 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깎을 최소화하고자 찾고 있음.

□ 제주 제주시

- 장년층 1인 가구의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으로 당장 의료비 마련이 어렵고, 퇴원 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최근 가장 빈도가 높은 상담의 주된 욕구는 가족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의 위기 상황 지원 욕구임,

- 지역 주민들이 지역 내 대상자의 알코올중독, 수집증후군 및 정신적 문제 등으로 상담 의뢰 등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

■ 최근 상담의 주된 욕구 및 문제 영역이 과거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서울 광진구 (1)

- 인권 강화에 따른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1인 청장년 정신질환자 입원치료가 어려워지고 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언론 보도가 늘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커져 지역사회 내에서도 정신질환자가 더욱 고립되고 있음.
  - 과거에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과 엄격하지 않은 보호자(형제)에 의한 입원으로 적기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공공기관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인권에 대한 문제로 소극적인 대처를 하게 됨.
- 또한 보호자가 있는 경우도 입·퇴원 후 보복과 오히려 가족 간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입원치료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짐.

□ 서울 광진구 (2)

- 주민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여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짐.

□ 서울 사회복지관

-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많은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됨.
  - 특히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인권도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임. 인권의 양 칼날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 등이 상담의 주요 이용자들의 달라진 태도임.

- 예전에는 정신과 질환이 있는 경우,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의 주요 개입이 잘 이뤄지지 않았음. 요즘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국가적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전달받고 가족들의 개입에 대해 설명하면, 치료 의지를 갖게 되는 점들이 달라진 점들임.

□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미리 예측되는 요인들을 뽑아서 사전에 미리 방문하는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점이 아동학대 및 요보호 아동 측면에서는 달라진 점으로 보임.

□ 경기 고양시

- 노인세대들이 경제적인 추가 지원을 희망할 때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일자리를 통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짐.

□ 경기 광명시

- 과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욕구 표현이 늘어남.

□ 경기 노인복지관

- 최근 수명이 연장되면서, 필요로 하는 욕구가 달라진 만큼 생활 영역에서도 추구하는 가치와 복지의 관점이 달라짐.
- 지역의 특색이나 경제적인 요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따라 특징은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담을 나누어 보면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채우고 싶어 하기보다 앞서는 것이 정서적 지지임.
  - 현재를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시간은 정신적인 면에서 더 지지를 받고 싶어 하며 어떻게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라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복지서비스를 원하고 있음.

- 예전에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 집중되어 '밥 먹고 살 걱정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내 가족보다는 나 자신과 배우자 및 파트너에 중점을 두고 정서적 지지와 교류에 대해 앞서 생각하는 것이 큰 차이임.

#### □ 경기 자활센터

- 과거 자활 참여 주민의 주된 욕구는 일자리와 안정적 수입이었다면, 현재는 자녀의 진로 고민이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젊은 청년층의 자활근로사업 의뢰가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는 타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고, 자녀는 본 센터로 의뢰되는 일도 있었음.

#### □ 인천 서구

- 자활사업 희망 참여자가 증가함.
  - 근로무능력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늘어났으며, 낮은 생계비보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인상된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특히 자활근로소득으로 인한 자활장려금과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큼.
- 취업성공패키지나 일반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과거보다 높고, 임시 일용직 소득자가 소득 상실로 인해 일자리 연계를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일자리가 확정되면 자활사업 참여보다는 최저시급의 향상으로 임시 일용직이라도 취업하려는 반대 의견도 상대적으로 높음.
- 청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빈도가 증가함.
  - 과거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희망하였던 청년층이 일자리 부족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함.

#### □ 인천 부평구

- 과거에는 경제적인 욕구로 상담을 했지만 요즘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민원

이 발생해 상담을 요함.

- 민원인들의 연령이 기존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젊은 가정의 상담이 늘어남(고용에 대한 의욕 상실, 경제적 욕구 의지 미약).

□ 인천 자활센터

- 자활근로의 특성상 과거에는 연령대가 기본 40~50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젊은 층부터 오면서(20대부터 60대까지) 욕구 또한 다양해졌음.
  -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 교육을 원하기도 하고, 심지어 창업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증가함.
  - 과거에는 알코올중독이나 정신과적인 치료 및 심리상담 연계가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에는 본인들이 통제할 수 있다며 굳이 원하지 않음.

□ 광주 광산구

- 안정된 경제생활 및 건강 유지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기대수명 연장 및 고령화로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취업, 고용의 문제가 청장년층에 국한되지 않고 노인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임.
  - 가족해체로 인한 소득원 상실로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문의가 늘어남.
  - 노인일자리사업에 예전에는 저소득 노인만이 참여하고자 하였다면 최근에는 저소득 계층이 아닌 중산층에 해당이 되더라도 집에서만 있지 않고 간단한 일이라도 하고자 하여 신청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음.
- 약자에게만 보장되는 제도를 넘어, 사회서비스나 일자리와 같은 일반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의 서비스 욕구를 표현한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점임.
  -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만 정책과 복지 시스템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사업을 일반 시민들도 받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혜택을 탐구한다는 점이 달라진 점임.
  - 의식주 욕구보다 정서적 외로움에 대한 욕구가 많아짐.
  -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욕구는 기존에도 있었으나 주거와 관련하여 구체

적인 상담이 이루어짐. 주거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보증금 마련이 힘들다는 상담이 늘어남.

- 현재는 워낙 원스톱으로 하는 업무 처리가 많아짐에 따라 여러 영역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기를 원함.
  - 과거에는 특정 욕구나 문제가 비교적 간단명료하였으나, 최근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욕구가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화되었음. 욕구나 문제 해결을 위해 동료나 부서 간 업무 소통과 공유가 더욱 활발히 필요해졌음.
-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져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 등을 구실로 한 부정수급이 많아지고 있음.
  - 과거에는 국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을 낙인으로 생각하며 부끄러워서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든 이겨 내려 했다면, 최근에는 어떻게든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짐.
  -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복지 문턱이 과거에 비해 낮아짐.
  - 복지병에 걸린 사람이 많음을 느꼈음. 예컨대,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다시 오겠다는 하는 경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며 정부 돈을 받게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민원 등이 많아지고 있음.

#### □ 강원 자활센터

- 최저 인건비 증가에 따라 지난해 자활사업 인건비도 전년 대비 27%가 인상됐고, 자활장려금 부활, 자산 형성 지원이 되면서 일상생활 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 욕구가 줄어들음.
- 심리상담은 그간 자활센터 내에서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사례관리 지원을 하였지만, 현재는 병원에 의뢰가 필요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농촌 지역은 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도 부족해서 원활한 지원도 어려운 상황임.

□ 충남 서천군

- 각 지자체에서 사례관리, 후원 등의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결했던 일생생활 부분도 정부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 눈에 보이는 사업보다 근본적인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분야, 사회적 약자, 질병, 장애, 일자리 관련 복지가 좀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과거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농촌의 특수성도 있지만 농촌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노인층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기초연금을 저축하는 경우도 다수임. 기본적인 연금으로 삶의 질이 상당히 향상되었음.
  - 그 이전에는 빈곤이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복지 혜택을 많이 알고 관에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이 비교적 빈곤보다는 복지 이외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음.

□ 충남 연구기관

- 성인 장애인의 돌봄 문제
  - 장애인 자녀 가족원의 인식 등이 달라짐.
  - 과거 지역 내 장애인 인프라가 전무하고 생계 등의 이유로 성인 장애인 자녀가 방치됨.
- 치매 가족원
  - 고령화 사회와 평균수명 증가로 치매 환자 규모가 늘고 있음.
  -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구조임.

□ 경북 안동시

- 과거에는 몰라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요즘은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의 발달과 매체들의 홍보 등으로 어느 정도 정부 혜택을 알고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등 좀 더 세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옴.

## □ 경남 산청군

- 노년층을 제외한 계층은 금전 지원을 최우선으로 받고 싶어 하며, 노년층인 경우 의료 지원을 최우선으로 받고 싶어 함(현금 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만족).
- 일자리 지원을 받고 싶어 하지만, 사무직이나 관리·감독하는 유형의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욕구에 맞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음.
  - 노년층의 경우 일을 하고 싶어 해도 회사 등에서 60세 이상은 아예 구인을 하지 않음.
- 60~65세인 경우 근로능력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자녀(미취업, 저임금)로부터 부양받지도 못하고, 본인의 재산은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할 정도만 있는 수급권자가 어려움을 하소연하지만, 차상위계층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다수임(예컨대, 승용 차량이 있을 경우 환산율100% 기준으로 인해 수급 제외되는 경우 있음).
- 과거에는 마을에서 누구나가 실제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가구는 공공부조 지원을 받았으나, 현재는 공적 자료 등이 투명해져(실명제 등), 실제 본인의 생활 형편과 이웃에서 생각하는 생활 수준이 다른 경우가 있음.
- 생계급여의 경우 부부일지라도 따로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
- 질병으로 인한 의료급여 긴급지원이 많음.
- 가정폭력 관련 상담 요청이 증가함.
- 사회보장수급권 기준에 부적합한 주민도 복지급여가 본인의 당연한 권리인 양 억지를 쓰거나 일선 사회복지사가 융통성 없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음. 선정 기준을 무시하여 무조건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당당함과 잘못된 권리의식이 있음.
  - 예전에는 선정되지 못하는 사유를 안내하면 일부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불만이 있을지라도 수긍하였음.

## □ 경남 의령군

- 과거에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주로 보았으나 요즘은 사회, 국가, 집단성

을 보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의료, 보조적 사회정책의 필요성 있음.
- 예) 고령화 지역은 노인일자리 양을 많이 늘리고, 청장년 일자리는 양보다 질(인건비 차별화)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전북 군산시

- 2019년 6월부터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가 8개 지자체(광주 서구,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대구 남구, 제주시, 화성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음.
-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본인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게 됨. 읍면동 주민센터 내 간호직과 사회복지직이 협업하고 지역사회 내 민관 복지자원을 파악하여 서비스 연계 및 통합돌봄 상담 전담 창구 개설 등으로 체계적인 원스톱 민원 처리를 구현하고자 함.
- 또한 마을 내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고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순히 복지정책을 전달하는 택배서비스가 아닌 복지를 디자인하고 기획할 수 있는 인력을 요구하고 있음.

□ 전북 장수군

- 개개인의 복지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음.
- 복지 대상자에게 주어진 혜택들과 정부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제주 제주시

- 과거 복지 대상자는 노인의 노령과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되어 경제적 지원이 주된 욕구였으며, 그 외 가족 구성원 중 중·고교 자녀의 학비 및 양육비 마련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 영역이 대다수를 차지했음.

- 최근 가족 간의 유대감 약화와 미혼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본인의 주거비 마련과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미래 설계 및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과 부상을 당하면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대상자는 결국 공공복지서비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됨.
  - 가족들은 부양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약하고 관계 회복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양상을 보임.
- 지역 내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 증세가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한 주민들의 상담 의뢰 및 조치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사회 범죄가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현상으로 보임.
  - 과거 친밀한 이웃 관계 형성으로 이웃의 속사정을 훤히 알 수 있어 취약한 이웃을 발굴해 복지 지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 사회는 이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 이슈에 의존하면서 그 불안감은 더 커지게 된 것으로 보임.



제 3 장

##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모니터링

제1절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특성

제2절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3

##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모니터링 <<

### 제1절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특성

#### 1.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의 개인 및 가구 특성

■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중 장기수급자의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구원 구성과 개인적 특성을 포함해서 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 □ 서울 광진구 (1)

○ 가구원 구성: 만성질환이 있는 청장년 1인 가구

○ 특성: 공적부조 의존성이 매우 큼.

-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많고, 형제들과도 경제적 이유 및 관계 갈등으로 서로 왕래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음.
- 부모 형제 외 제3자와 사회적 관계를 맺더라도 정서적 지지체계가 아님.

##### □ 서울 광진구 (2)

○ 가구원 특성: 책정 당시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 가구였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었던 가구.

- 주요 특성: 65세 이상 장기수급자는 경제활동 가능 시기에 일정 직업 없이 식당 일일 고용 내지는 건설 현장의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 만성적인 빈곤층이며, 안정된 주거 공간 없이 월세로 생활함.
- 또한 자녀 양육 시기에도 경제적 원인으로 자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구직활동이 어려워 자녀들(부양의무자)도 대부분 어렵게 생활함.

□ 서울 사회복지관

○ 장기수급자의 사례

- 사례 1. 부모·자녀 세대이며, 어린 자녀(3세)가 있으며, 질환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구성원으로 있는 세대임. 부모 모두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나, 어린 자녀의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녀로 인해 장기수급을 받고 있는 사례임.
- 사례 2. 한부모-자녀 세대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해 장기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임.
- 사례 3. 조손가정이며, 성년 손자녀와 미성년 손자녀가 포함되어 구성된 세대임. 성년 손자녀는 대학교 입학으로 현재는 장기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임.

○ 장기수급자의 특성

- 사례 1의 특성: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 존재할 시 근로능력 및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급 탈락이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돌봄을 지원할 사회적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예산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다면 탈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됨.
- 사례 2의 특성: 한부모-자녀 세대이며, 만성적 질환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례임. 근로능력이 없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고 있고 관련한 내용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탈수급에 대한 의욕을 갖지 않음. 안정적인 수급 지원을 통해 수급비 지원 안에서 생활을 영위해 가는 특징이 있음.
- 사례 3의 특성: 조손가정으로 현재는 근로능력이 없지만, 앞으로 근로능력이 있을 수 있는 성년 손자녀의 존재로 탈수급의 여지가 있는 세대임. 하지만 대학교 교육을 받고 있고 사회에 나가기 전 준비 단계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의 미흡함이 존재함.

## □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

## ○ 장기수급자 특성

- 학대 가정의 경우
  - 사업 부채 등으로 술로 허송세월하고, 분노를 아이들에게 풀고 아이를 학대하는 등 관리 대상의 가정임.
  - 갑자기 뇌혈관 지병을 얻어 긴급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가의 지원(기초보장제도)을 받게 되면서 장기수급자의 길로 접어들.
  - 그러다 보니 부인이 가출하고 주변 친인척의 지원도 없어 고립 상태로 어린아이들의 방임과 신체학대가 반복됨.
  - 수급비의 대부분을 술 먹는 것에 지출함.

## □ 경기 고양시

- 장기수급은 한 개인의 여러 특성 중 하나의 상황적 특성임. 장기수급자라는 일반화가 하나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함.
- 장기수급자의 특성에 의해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장기수급에 머무르게 하는 상황적 요인들에 관한 접근이 바람직함.
- 장기수급의 원인
  - 수급자 가정의 근로무능력자(아동, 노인, 질환, 장애, 알코올중독 등).
  - 근로능력자 중 근로 회피자, 근로는 하나 소득 신고를 회피하는 자.

## □ 경기 광주시

## ○ 장기수급자의 특성

- 장기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근로 불가.
- 부양의무자 부재 또는 부양능력 없음.
- 부채로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

- 사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장기 질병으로 근로 불가 판정.

- 김○○(1965년생, 남, 독거, 수급권자)
  - 가족사: 1남 1녀의 성년 자녀가 있고, 대상자의 알코올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한 부자가정.
  - 건강사: 1녀의 중증 및 장기질환으로 수급권자 판정. 대상자의 알코올중독과 통풍.
  - 주거 상황: 월세, 반지하(방1, 거실 겸 주방, 내부 화장실 1).
  - 경제 상황: 대상자는 정신적 문제와 통풍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고, 1녀의 질환으로 간병 생활을 하고 있음.
  - 2019. 6. 현재 자녀가 성인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주소 분리와 자녀 부양불가 판정, 알코올중독과 통풍 등 대상자의 근로능력 없음 판정으로 장기수급 자격 유지 중임.

□ 인천 부평구

- 1인 가구가 대부분임(세대주를 포함해 가구원이 노령, 질병 및 장애를 가지고 있음).
- 공공복지 및 민간 연계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음.
- 수급에서 받는 경제적인 혜택과 탈수급(근로)을 통해 받는 월급 등을 비교함.
- 수급권이 대물림되거나, 자녀들이 탈수급에 대한 열망이 적은 경우가 있음.

□ 인천 자활센터

- 지역 자활센터는 조건부수급자가 필수 참여를 하는 곳으로 자활 참여 기간이 최대 5년임. 자활근로를 하는 동안 자활급여소득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해 자활 특례(생계탈락)로 유형이 변경(1인 가구 기준)되기는 하지만, 자활 참여 종료 2~3개월 후 다시 수급 신청을 함. 그러면서 장기수급자로 국가의 제도권 안에 있고 싶어 함.
- 특히 한부모 가정이거나 자녀가 어린 경우는 양육이나 돌봄 등으로 인해 수급

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음. 설사 일반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는 실정임. 노동의 대가를 형제자매 명의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있음.

#### □ 대전 동구

- 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 1만여 명의 수급자가 있으며 이 중 9000여 명(90%)이 일반수급자임.
- 나머지 1000여 명(10%)이 조건부수급자이나 이 중 50%(500여 명)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건 제시 유예에 해당, 나머지 50%(500여 명)가 자활사업 참여, 조건 불이행 등으로 구성됨.
  - 장기수급자 가구의 특성: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함 → 자활이 불가능함.

#### □ 부산 남구

- 노인 단독 세대
  - 2002년 수급자 신청 당시에는 알코올중독인 아들과 손자 2명과 4인 가구로 보장.
  - 2008년 아들 사망 시까지 조건부수급자로 보장받았으나 아들의 조건 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되었음.
  - 2008년 아들 사망 후 미성년 손자녀를 양육하는 3인 가구로 보장.
  - 2012년 손자의 소득활동으로 보장이 중지됨.
  - 2014년 손자의 군 입대로 재신청해 수급자로 보장.
  - 2016년 손자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함.
  - 2019년 현재 손자 및 손녀의 소득으로 인한 전출에 따라 1인 가구로 보장.
    - 대상자는 17세에 결혼하여 3남매를 출산하였고, 남편의 알코올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며 남편의 사망 후 야채 장사를 하여 생계를 유지함.

- 큰아들이 결혼하였으나, 부인의 가출로 인해 손자손녀를 양육하지 못하여 같이 생활하다가, 큰아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수급자 신청을 하였음.
- 큰아들도 술 문제로 조건부수급을 이행하지 못해 생계비 지원은 받지 못하다가 사망 후 미성년 손자녀 양육으로 지원받음.
- 손자 및 손녀가 취업하여 전출,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모두 사망하고 노인 단독 세대로 보호받음.

#### □ 광주 광산구

##### ○ 근로 불가 유형

- (가구주) 노령, 장애, 질환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여 장기수급으로 이어짐.
- (부양가족) 가족 중 장애나 질환이 깊은 자가 있어 돌봄 제공을 위해 근로하지 못함.

#### □ 충남 서천군

##### ○ 장기수급자 중에는 고령, 질병,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주위 여건과 건강 상태가 열악하거나 또한 자활 의욕이 상실된 가구가 장기수급을 받고 있음.

- 장기수급자 특성: 수혜의 보호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며 탈수급을 생각도 하지 않고 안주하는 특성이 제일 크며, 소득활동이 가능한 수급자도 보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선상에서만 소득활동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감추거나 함.
- 가구원 구성과 개인적인 특성: 가장 기본은 근로능력 상실과 자활 의욕 부재임. 비교적 안정된 수급 수혜로 안주하려는 특성이 있음.
- 사례: 부자가정으로 자녀 5살 때부터 수급을 받음. 알코올 의존으로 농촌에서 단순한 근로는 가능하나 탈수급이 될 정도의 소득활동을 안 하고 전형적인 알코올 의존 생활을 하면서 가정 내 환경이 불결하여 자원봉사의 힘을 빌려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함. 자녀 또한 학교는 다니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성취 미약, 집 안 내 컴퓨터 게임에 집중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 실업고 재학 중 실습을 통해 취업하여 1년간 다녀서 수급이 중단되었는데, 곧바로 실직 상태가 됨. 성실한 직장생활을 유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타지에 진출 가서 부친은 다시 수급 유지. 이후 자녀 소득이 표출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면서 왕래가 거의 없고 여전히 장기수급자로 보호 중. 알코올 의존이 높아 탈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됨.

#### □ 경북 안동시

##### ○ 장기수급자의 유형

- 첫째, 가구원 수급자가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장기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가 있음(가구원이 노인세대로 구성된 가구나 장애 등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로 구성된 경우).
- 둘째, 가족의 해체로 한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성장하여 취업 시까지 보호를 받는 세대로 어느 정도의 보호를 해 주면 가구원 중에 취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향상되어 탈락되는 경우가 있음.

#### □ 경남 산청군

##### ○ 장애인 가구

- 가구 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복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탈수급하지 않으려고 하며, 기초생활수급에 진입하려는 의지가 강함.
- 중증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면 당연시되어 별도 가구로 구성하여서라도 수급자로 지속하려고 함. 부모인 본인들이 사망 이후에라도 장애인인 자녀가 계속 보장받기를 원함.

##### ○ 다자녀 가구이며, 학생이 있는 경우

- 다자녀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유지되면 생계급여 등 복지 혜택이 많으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함.
  - 급식비, 학비, 대학 기숙사비, 입학 등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복지 혜택

이 많기 때문임.

○ 소유 재산이 없고 저학력으로 구성된 가구

- 기본 재산이 없는 경우(특히 농촌의 경우 전답, 주택) 수급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줄어들며, 저학력 등으로 취업이나 자립 능력이 현저히 낮아 지속적으로 수급자로 남아 있음.

□ 경남 의령군

○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음.

- 연말 등에 어려운 계층에게 김장 김치 지급 시 해마다 지속적으로 요구함.
- 일반적인 가구는 누군가에게 선물, 나눔 등을 받으면 답례하려는 성향이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은 답례하려는 성향이 거의 없음.
- 받는 것에 익숙해서 시기별, 월별로 무엇을 주는지 알아서 기다림(명절 선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 돕기 등).

□ 전북 완산구

○ 근로무능력 세대로 구성

-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 소득 재산 변동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보호받음.
- 가구원 모두가 질병 및 연소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음.
- 단독가구로 질병(정신질환 등) 및 알코올중독 등의 만성적이고 해결이 힘든 문제가 있는 세대.

○ 근로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구원 수가 많고 소득이 적은 세대

- 한부모 가정이나 다자녀로 부 또는 모의 소득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세대.

○ 이혼한 한부모 가정 세대

- 모자가정의 경우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에서 수급자 신청 후 보호받음.
  - 자녀들이 성장하여 대학 진학, 취업할 때까지 보호받음.

- 부자가정인 경우 성격 차이보다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혼한 경우가 많아 수급자로 계속 보호받음.

- 취업하여 탈수급하기보다는 자녀들의 취업으로 수급이 중지되는 경우가 많음.

○ 신용불량으로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는 세대

-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나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용 회복 지원을 받기 위해 수급자로 보호받음.

- 개인회생 등 신용 회복 지원으로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호받음.

□ 전북 장수군

○ 경제활동 의사가 없음

-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은 공돈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급자 탈락을 모면하고 공적 지원을 받으려고 함.

□ 제주 제주시

○ 개인별 수급자: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로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를 말하며, 주거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우리 동 개인별 대상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독거노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장애, 중한 질병, 기타 등의 사유로 수급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가구별 수급자: 개인별 수급자 기준과 거의 동일하며 개인이 아닌 가구원 전체에 대해서 기준이 적합한지 확인 및 조사 후 보호하고 있음.

## 2.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가능성과 이유

■ 장기수급자의 경우, 탈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떤 경우에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왜 탈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 서울 광진구 (1)

#### ○ 사례: 만성질환이 있는 청장년 1인 가구

- 장기간의 공적부조 수혜 및 질병으로 근로가 어렵고 수급자 가구 자체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가능성이 희박함.

#### ○ 장애 요인: 질병 및 빈곤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여 탈수급에 대한 의지가 저하되고 장애 요인으로 이어짐.

### □ 서울 사회복지관

#### ○ 장기수급자의 사례

- 부모·자녀 세대이며, 어린 자녀(3세)가 있으며, 질환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구성원으로 있는 세대임. 부모 모두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나, 어린 자녀의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녀로 인해 장기수급을 받고 있는 사례임.

#### ○ 탈수급 가능 사례

- 위 사례의 경우는 사회적 제도 마련 및 지역사회 내에서 협력하여 자원 연계를 했을 경우, 탈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임.

### □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

#### ○ 탈수급 가능성이 없다고 봄.

## □ 경기 고양시

## ○ 근로능력자 중 근로 회피자

- 근로 회피자에게 소득공제, 의료수급권 단계적 유지, 희망키움통장 등의 제도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

## ○ 가구원 중 근로능력자 1인의 생계급여 포기 후 수급권 유지자

- 가구원 1인의 생계급여 제외 이외에 추가적인 제재 방법이 필요함.

## □ 경기 광주시

## ○ 탈수급이 가능한 경우

- 부채로 인한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
  - 근로를 통한 부채 해소 후 수입의 순기능 작동.
- 미성년 가족원의 성장으로 인한 근로 가능.
  - 정기적인 수입으로 가계에 기여.

## □ 인천 부평구

##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중(젊은 부부, 젊은 한부모, 중장년 1인 가구) 부모의 의지에 의해 탈수급되는 경향이 있음.

- 예 1)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 수급 가구가 되었지만, 자녀의 성장과 친모(부)의 경제활동으로 탈수급됨.
- 예 2) 장년 1인 가구가 질병을 치료받고 취업(자활)을 통해 탈수급됨.

## □ 인천 자활센터

## ○ 장기수급자의 탈수급은 질병으로 근로가 힘들었던 분들이 몇 년간의 치료로 인해 좋아져서 취업 등을 하는 경우(질병 발생 전 전문직으로 근로를 하신 이력이 있는 분). 그러나 거의 희박함.

□ 대전 동구

○ 탈수급이 가능한 경우

-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성장에 따른 가구원 소득 변경으로 탈수급 가능함. 그러나 빈곤의 대물림으로 자녀의 올바른 성장이 아닌 실직 등으로 이어진 경우는 탈수급이 지연되고 기초수급이 지속 유지됨.

○ 탈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 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 전체 90% 정도의 기초수급자가 일반수급자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함.
  - 근로능력 상실의 사유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연령이며 이후 장애, 질병의 순임.

□ 부산 남구

○ 한부모 가정 사례

- 이혼 후 한부모 가족으로 청소년 자녀를 양육함.
- 청소년 자녀 대학 졸업 후 취업하여 소득 발생.
- 자녀의 질병이나 장애만 없다면 탈수급이 가능함.

○ 탈수급의 가능성

- 가족 구성원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건강한 가구원이라면 탈수급이 가능함.

□ 광주 광산구

○ 장기수급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탈수급 가능성이 없음.

○ 다만, 수급 가정의 세대원 중 자녀가 성장하여 근로에 종사하거나 생활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탈수급은 가능함.

- 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부분 소득활동을 하게 된 자녀는 기존 세대의 수급 유지를 위하여 분가하여 부양의무자로 변경하게 되나 이 또한 1~2인 가구의 부양의무가 기준을 초과하여 원세대가 수급탈락할 가능성이 높음. 이 때

문에 성장한 자녀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데 장애가 됨.

- 따라서 자녀의 성장으로 탈수급을 시도하는 경우 일정 기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주어 자녀가 경제적 기반을 잡고 원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시간적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 충남 서천군

- 장기수급자의 경우 농어촌에서는 본인의 소득, 재산이 거의 없다고 판단됨.
- 장기수급자 경우 탈수급이 가능한 가구는 어린 자녀가 성장하여 취업했을 경우임.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으로 탈수급된 경우는 있으나 그 이외 본인의 소득으로 자활은 거의 없음.
  -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한정되어 있고 주거 문제에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수급자나 비수급자의 생활양식과 환경은 거의 비슷한 상황. 본인이 특별한 이탈과 정신적인 문제나 알코올, 주변 관리가 안 되는 수급자 이외에는 농촌 지역의 생활 패턴은 비슷함.
  - 특히 소득, 재산의 변화가 적은 농촌 지역은 탈수급의 가능성이 희박함.

#### □ 경북 안동시

- 장기수급자의 경우(4년 이상)는 장애, 휴업, 폐업, 교정시설 출소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급권자로 들어와서 질병 호전 등 근로능력이 발생되거나 취업 등 소득 향상으로 탈수급을 한 사례가 많음.
- 예) 한부모 세대: 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모와 두 자녀가 수급을 받다가 자녀의 성장과 모의 취업 등으로 탈수급을 한 사례.
  - 부 48세(사망): 질병으로 사망.
  - 모 45세: 화장품 가게 점원으로 일하며 열심히 자녀들(아들 둘 18세, 15세)과 살면서 4년 정도 수급자에서 자녀 취업 등으로 탈수급됨.

□ 경남 산청군

○ 자녀 취업 이후 탈수급 가능

- 기초수급자인 경우 대학생까지는 각종 혜택이 많기 때문에 탈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이후에는 자녀의 취업 등으로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어쩔 수 없이 탈수급함(부양의무자인 자녀 4명 중 1명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탈수급됨).

□ 경남 의령군

○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가능성 여부

- 근로능력 개선 여지, 장애인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과도한 부채로 신용회복위원회 납부 등 탈수급 가능성은 없음.
- 탈수급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증가로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단돼 자격이 중지됨. 출가한 딸, 가구 금융재산 2억 원 이상,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이 향상되어 증가함.
  - 부양의무자도 각종 특례제도가 있어 실제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전북 완산구

○ 한부모 가정이나 다자녀로 부 또는 모의 소득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세대.

○ 자녀들이 장성하여 독립하게 될 시기에는 탈수급이 가능하다고 봄.

○ 탈수급이 가능한 이유

- 세대에 근로능력자들이 생겨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탈수급 가능성이 높음.

□ 전북 장수군

○ 탈수급 가능성 없음.

## □ 제주 제주시

- 장기수급자 스스로의 탈수급은 아래에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미미함.
  - 탈수급하는 대상자: 사망,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중지됨.
- 위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 보호받게 되면, 스스로 탈수급을 원하는 대상자는 전무한 것 같음. 오히려 중지 사유(소득인정액 초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기타 사유)가 발생해도 계속적으로 보호받으려는 대상자가 많음.
- 기존 대상자 중에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중지하고자 할 경우 저항이 매우 심하며, 그것으로 인해 업무 담당자들의 스트레스가 심함.

## 3.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장애 요인

▣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면, 어떤 경우에 탈수급 가능성이 낮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 서울 광진구 (2)

- 탈수급 가능성 낮은 가구 유형: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 주요 특성: 장기수급자 가구는 가구 자체의 소득, 재산 변동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 탈수급의 영향 및 의존성이 매우 강함.
  - 탈수급 장애 요인: 장기수급자의 자녀(부양의무자)들 또한 학력이 낮고 구직의 어려움이 커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거나, 미성년 자녀가 성장한 경우 보장 중지의 우려로 가구를 분리하거나, 취업 회피, 가족해체 등의 사례도 있음.

□ 서울 사회복지관

○ 탈수급 가능성이 낮은 사례

- 사례 1. 한부모-자녀 세대이며, 미성년자녀가 있으며,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해 장기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임.
- 사례 2. 조손가정이며, 성년 손자녀와 미성년 손자녀가 포함되어 구성된 세대임. 성년 손자녀는 대학교 입학으로 현재는 장기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임.

○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장애 요인

- 사례 1의 경우 한부모 가정 안에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미약하며, 가장으로서 생활비가 필요한 세대로 정부의 사회적 제도에 기대어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 안정적 수입원이라는 생각을 가져 탈수급의 의지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 사례 2의 경우 가정 내 수입원을 확보할 구성원이 없으며, 사회로 나갈 준비중으로 시기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세대임. 대학교 입학 이후 취업이 되었을 때는 수입원 확보의 길이 열리지만, 대학원 입학 등의 취업 정체기에 있는 세대의 경우는 장기수급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음.

□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

○ 탈수급 불가능 요인

- 중병 등으로 건강 재생 불가능.
- 빈곤 탈출 의지 박약.
- 배우자의 가출 등으로 가족해체.
- 일시적/한시적 방법과 내용으로 이루어진 지원 방법.
- 구직 등 탈수급을 위한 노력 부재.
- 많은 어린 아이들.

○ 탈수급 불가능 가정 사례

-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진 아내를 내버려 두고 잦은 다툼.
-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 못해 막노동하고, 그 외중에 허리 골절 등 심각한 부상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움.
- 어린아이가 줄줄이 있음(4세, 3세 1세).
- 아동 방임 상황이 심각함.
- 최근 아동수당 및 수급비로 근근이 생활함.

□ 경기 고양시

○ 수급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탈수급의 가능성이 낮아짐.

- 수급의 상황에 익숙해지고 수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함.

○ 영구임대 단지, 매입임대주택 밀집 지역 등 수급권자 밀집 지역에 거주함.

- 기초수급비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생계비만으로 지내는 생활이 익숙해지고 교류와 문화가 형성됨.

□ 경기 광주시

○ 탈수급 가능성이 낮은 사례

- 장기 질병 및 고액 치료비 발생 대상.
  - 당뇨·신부전·암·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장기적 진료비나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사례. 근로 불가로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
- 노인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또는 부양이 불가능한) 동시에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노인.
- 장애 대상
  -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장애 요인

- 장기질병·고령·장애로 인한 근로 불가: 정기적인 수입이 없음.
- 수입을 불가항력의 지출(병원비)이 증가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인천 부평구

○ 장기수급자의 경우 노령, 질병 및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탈수급 가능성이 미약함.

- 예) 경제적인 활동으로 가구원의 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수급 유지(의료급여 유지).

○ 자녀의 성장에 의해 자연적 탈수급이 되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부양능력 미약으로 다시 수급자가 되는 경향이 있음.

- 예 1) 수급 가구(가구주, 자녀)가 복지 혜택에 익숙하여 수급 유지를 원함(경제활동 노력이 미약함).
- 예 2) 탈수급이 되어도, 수급 가구의 자녀가 부양능력 기준에 미달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다시 수급자가 됨.

□ 인천 자활센터

○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가능성이 낮음.

- 장애 요인: 질병, 경력 단절, 자격증 무, 일용직 이력(현장 일), 낮은 학력, 알코올 문제, 우울증, 조현병(성격장애), 근로시간 등.

□ 대전 동구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가 탈수급이 어려운 경우

-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 무지, 질병, 마인드컨트롤의 부재, 중장년층으로 연령 변화 등으로 탈수급이 어려우며, 조건부수급자로 자활 참여로 안주하고자 함(구직 시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곧바로 실직으로 이어짐).

## □ 부산 남구

## ○ 부양 관계가 복잡한 가정

- 가족이나 부양 관계가 없는 경우.
- 최종 소득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만 남기고 모두 이탈함.
- 이후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가구원만 남아 수급자로 장기 유지함.

## ○ 근로무능력 가구

- 노인, 장애인, 질환자.

## ○ 장기수급자 탈수급 장애 요인

- 경제활동(탈수급할 만한 소득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
- 노인이나 장애인이 참여하여 탈수급 가능한 소득이 보장된 일자리가 없는 경우.
- 질환자의 경우 치료가 우선이라 치료가 끝나기 어려운 만성질환(정신 포함)의 경우 치료가 종결되지 않는 한 탈수급이 어려움.

## □ 광주 광산구

## ○ 근로 불가 유형

- 근로가 불가하여 지속적으로 수급을 받는 경우, 특히 알코올중독이나 장애 등 호전되기 힘든 사유이면 탈수급이 어려움.
- 장애 요인: 근로활동을 하여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액이 떨어지는 것이 근로활동에 대한 심리적 위축을 일으킴.
  - ‘실제로 얼마나 급여액이 떨어지는가’도 문제지만 수급자분들이 대부분 ‘근로활동을 하면 생계급여가 떨어지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음.

## □ 충남 서천군

-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서는 일자리나 소득 창출의

기회가 많은 편이 아니고 인구 감소와 젊은 계층의 대도시 진출로 소득 생산이 가능한 젊은 층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음.

- 그리고 농촌 지역의 수급자 구성 현황은 세대당 1.3으로 단독 세대, 고령 인구, 장애 가구로 정상적인 근로와 건강 상태를 갖춘 수급자가 적음.
- 이와 관련하여 자활 참여 구성원도 건강 상태가 양호한 수급자가 매우 적음. 전반적으로 활동 가능성이 있고 취업, 창업이 가능한 근로가능 연령의 수급자 비율이 적음.
- 수급자의 탈수급 요건(적정한 연령, 건강,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갖춘 수급자가 적음.

□ 경북 안동시

- 장기수급자는 연령 등 장애로 인해 탈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젊은 수급자들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주로 게으름과 알코올중독 등 질병 때문에 탈수급이 어려움.
  - 주로 정신적인 의지가 약한 경우에는 밭 빠진 독에 물을 넣는 격으로 탈수급이 어려운 가구들이 있음.
- 수급자로 들어와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의지가 약한 경우는 탈수급의 가능성이 낮음.
- 수급자의 의지도 많이 좌우함.

□ 경남 산청군

- 탈수급 의지가 있더라도 탈수급 시 일상생활, 교육, 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여 수급자와 비교하여 역차별이 있으므로 탈수급하지 않으려고 함.
  - 수급자일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혜택, 그리고 각종 감면 서비스가 상당히 많음. 그러나 수급자 경계선에서 탈수급될 경우 수급자일 때보다 지출 비용이 많아 오히려 수급자로 진입해야 될 형편인 경우가 있어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굳이 소득이 많은 곳에 취업하지 않고 수급

자로 머물 수 있을 만큼 일을 하며 수급자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

-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음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판정이 되지만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밀려나는 건강 상태를 가진 경우가 많아 여전히 기초수급자로서 적절한 소득 수준을 유지하며, 편안하게 생활하려는 경우가 있음.

○ 가구원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며, 장기적인 일자리가 있으면 탈수급될 수 있으나 소득이 높고, 장기적인 일자리 등 본인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아 차라리 수급자로 남아 있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임.

#### □ 경남 의령군

○ 장애인등록자,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기본적인 생활력 및 근로의지가 약해 탈수급을 못 함.

○ 근로무능력자도 지속 안주하려는 성향이 있음.

○ 근로능력이 미약하거나 있는 조건부수급자의 경우는 조건 부과 유예 조건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

- 조건 부과 유예 선정
  - 개별 가구 또는 개인 여건 등으로 보아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곤란한 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 원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
  - 수술 등 환경 변화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알코올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 중독 등으로 치료 과정에 있는 자.

#### □ 전북 완산구

○ 단독가구로 질병(정신질환 등) 및 알코올중독 등의 만성적이고 해결이 힘든 문제가 있는 세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세대.

- 질병 및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을 하기 어렵기에 탈수급 가능성이 낮음.

○ 탈수급 장애 요인

- 만성적이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기에 탈수급이 어려움.

□ 전북 장수군

○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현 기초생활 정책은 수급자에게 너무 많은 수혜를 주고 있음.
- 특히 가정 경제가 어려운 가구는 회복이 더욱 어려움.

□ 제주 제주시

○ 탈수급이 적은 이유로는 수급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수급 혜택을 포기하려 하지 않음.

○ 65세 미만의 어떤 대상자 중에는 근로활동에 참여가 가능함에도, 수입이 발생하면 수급자 중지 사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탈수급의 장애 요인은 각종 특례 등으로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수급자 개인의 도적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함.

○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담당자가 허위 수급자를 적발했을 때, 적발 과정에서 수급자가 담당 직원을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복무 담당 부서에 고발함으로써 지적을 받는 등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4.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의지

■ 장기수급자의 경우 탈수급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탈수급 의지가 있는데도 장기수급자로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어떤 경우인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 □ 서울 사회복지관

###### ○ 장기수급자의 사례

- 사례 1. 부모·자녀 세대이며, 어린 자녀(3세)가 있으며, 질환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구성원으로 있는 세대임. 부모 모두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나, 어린 자녀의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녀로 인해 장기수급을 받고 있는 사례임.
- 사례 2. 한부모-자녀 세대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만성적인 질환으로 장기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임.
- 사례 3. 조손가정이며, 성년 손자녀와 미성년 손자녀가 포함되어 구성된 세대임. 성년 손자녀는 대학교 입학으로 현재는 장기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임.

###### ○ 탈수급의 의지가 있는 사례이지만 장기수급자로 남아 있는 이유

- 사례 1의 경우, 부모 모두 근로능력이 있으나, 자녀를 돌봐 줄 돌봄체계를 찾지 못한 경우임.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간병제도가 있다고 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간병을 지속해야 하는 상태임. 이 사례는 부모가 모두 탈수급의 의지가 있다고 하나, 장기수급자로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됨. 또한 취업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격의 한계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수급비를 지원받는 것이 취업을 하는 것보다 나은 경우도 발생함.

##### □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

###### ○ 장기수급자 잔존 이유

- 양질의 구직활동에 맞는 전문성 부족.
- 노동시장의 축소로 양질의 구직의 어려움.
- 가족해체 등으로 의욕 상실.
- 희귀난치병, 중대질환으로 건강 회복에 어려움이 있음.
- 게임 중독 등 다양한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음.
- 근로능력 회복이 어려움.
- 부모의 이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됨.
- 사업 실패로 빚이 있음.

○ 장기수급자 잔존 사례

- 남편과 일찍 별거하고 아이들 양육을 혼자서 도맡아서 식당일, 가사도우미 등 안 해 본 일 없이 일을 하였지만 월급은 너무 빠듯한데 아이마저 백혈병에 걸려 계속 지출이 필요했음.
  - 그러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절게 되어 일하는 것이 힘들어져 수급비 대상이 되었고 엄마는 우울증에 걸려 더 이상 구직활동이 어려워짐.
  - 아이와 엄마의 병원비로 수급비가 사용되고 있음.

□ 경기 고양시

○ 가구 구성원이 많은 경우

- 다자녀인 한부모 가정 등 꾸준히 근로활동은 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수급권을 유지하는 경우.
- 꾸준히 근로활동은 하나 전문 기술이 없어서 소득이 정체됨. 전문성 향상이 필요함.

□ 경기 광주시

○ 장기수급자의 경우 탈수급 의지가 있는 대상자가 있음.

- 탈수급 의지가 있지만 장기수급자로 남아 있는 이유

- 의지가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아직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음. 부채를 안고 있는 세대 중 개인회생을 위해 근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의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실행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 의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모르는 경우.

#### □ 인천 부평구

- 장기수급자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것에 만성적(익숙함)이기 때문에 탈수급에 대한 의지가 약함.
- 질병에 의한 치료비 부담, 근로 거부(회피), 근로할 의사 없음 등 수급 세대에 머물며 적은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탈수급을 거부함.

#### □ 인천 자활센터

- 일단 수급을 탈피하게 된다면 주거가 가장 문제시되기에 장기수급자들은 수급을 유지하고 싶어 함. 고시원이나 모텔 등은 월세가 많이 부담이 됨.

#### □ 부산 남구

- 처음 수급자가 되면서부터 의지가 점점 감소함.
  - 근로 유인책이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근로무능력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가서 어느 순간 일반수급자로 전환함.

#### □ 광주 광산구

- 장기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탈수급 의지가 없음.
- 특히 장애나 희귀질환과 같이 호전되기 힘든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탈수급에 대한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수당,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수급 탈락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
  - 의료보호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급여 의료비가 있을 수 있고, 근로를 못하므로 재산을 모으지 못함.

□ 충남 서천군

-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인해 수급 범주 안에서는 의료급여 등의 수혜로 인해서 수급에 안주하려 함.
- 간혹, 수급을 부끄러워하는 수급자도 있으나 타인과 비교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혜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탈수급 의지가 감소함.
- 찾아가는 복지사업으로 인해 방문 상담을 통한 관심과 혜택에 대해서 만족도가 큼.
- 간혹 농촌에서 목회자 생활을 하는 수급자가 있는데 자녀 교육을 위해, 자녀가 대학교에서 장학금, 기숙사 등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취업보다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통해 수급자로 혜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자녀가 대학 졸업 이후 취업하면 탈수급으로 가는 경우가 많음.

□ 경북 안동시

- 장기수급자의 경우는 세대마다 가구원에 따라 상황이 다름.
  - 한부모 세대인 경우는 자녀들의 취업 시까지 지원을 해주면 수급자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탈수급이 가능한 세대임. 장기수급자로 남아 있는 경우는 자녀가 취업 전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임.
  - 단독 세대는 본인의 의지와 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수급자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음.

□ 경남 산청군

- 탈수급 의지가 있는 경우는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취업 등으로 인해 부양의 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을 때까지 수급자에 머물러 있으려고 함.
  - 수급자 본인(본인과 배우자)이 수급자에서 탈락하여도 역진입하지 않을 정도의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탈수급 의지가 있지만, 농촌의 현실상 기준중위소득 100% 정도의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없어, 대부분 농업 등에 종사하게 되어 여전히 수급자로 머물

러 있는 경우가 다수임.

- 고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수급자는 거의 없어 탈수급으로 인한 각종 감면제도와 복지서비스들을 누리지 못하기보다는 적당한 소득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급자로 남아 있는 생활이 더 낫기 때문임.

○ 장기수급자는 이미 수급자로 지속할 수 있는 기준을 알고 있으며, 본인 나름대로 생활에 안착되어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음. 간혹 연말이나 명절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하소연하거나 읍박지르면 물품이나 후원금이 지원되므로 크게 아쉽지 않음.

- 생계급여부터 주거급여까지, 심지어 큰 수술이라도 하면 의료비(긴급복지)까지 모두 지원되기 때문임. 그래서 수급자로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함.

#### □ 경남 의령군

○ 탈수급 의지 없음.

○ 탈수급 의지가 있는데 장기수급자로 남아 있는 이유

- 장기수급자로 적응이 되어 더 나은 삶을 위한 용기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포기함.
- 초기에는 나이와 질환 정도가 경정도였으나 몇 년 후에도 의지와 환경이 나아지지 않음.
-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자격, 신체, 기술, 용기, 사회생활 등이 지날수록 약화됨.
- 예) 친척, 지인, 과거 직업 등에 몰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오래가지 못함.

#### □ 전북 완산구

○ 장기수급자들의 경우 생계급여와 같은 현금서비스 뿐 아니라 의료와 같은 현물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현금서비스가 중지된다 하더라도, 현물서비스 중지에 대한 저항이 큰 경우도 종종 있음.

□ 전북 장수군

○ 탈수급 의지 미약함.

- 탈수급 의지는 있으나 이미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에 적응이 되어서 힘들게 일을 하여 번 소득과 비교해 볼 때 수급자로 받는 급여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급자로 남기를 희망함.

□ 제주 제주시

○ 장기수급자들에게 탈수급 의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함.

- 우리 동인 경우에 지난해에 수급자 김○○ 씨 가구는 본인은 알코올성 질환으로 무직상태, 처는 정신장애 등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 하여 갓난 자녀를 보육원에 맡겼다가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에 참여토록 독려하자 자녀 양육을 핑계로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생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퇴소시키는 일이 있었음. 이들 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하게 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경우가 있음.

- 이들 대상자가 탈수급의 의지가 있다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후에 자녀를 퇴소시켜 함께 살려고 해야 할 것이나, 이렇듯 근로활동보다는 자녀 양육을 핑계 삼아 근로활동도 하지 않고 생계급여도 더 많이 받으려는 경우도 있음.

**5.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장기수급자가 탈수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 왜 탈수급 의지가 없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 서울 광진구 (1)

- 근로능력이 있는 청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일반 시장의 구직활동보다는 자활근로 참여로 수급자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으며,

- 탈수급인 경우 수급자와 빈곤의 정도 차이에 비해 복지서비스의 차이가 현저하여 탈수급에 대한 의지가 저하되고 장기수급자로 전락함.

#### □ 서울 광진구 (2)

- 장기수급자의 경우 환경적 원인 등으로 빈부의 격차 해소가 힘들고, 과업 달성의 목표 또는 목표에 대한 노력 정도가 매우 약하고, 또한 취업 등으로 탈수급 사유 발생 시에도 대부분의 경우 경제력은 탈빈곤을 거의 체감하지 못함.
  - 특히 부양의무자의 취업 등으로 보장 내역 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 시기에 빈곤으로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였다는 자괴감으로 가족에게 부양을 강제하지 못하고, 차라리 가족관계 해체를 주장하여 수급을 유지하는 사례자도 있음.
- 탈수급 시 동반하는 복지서비스 중지로 인한 경제적 부담, 예를 들어 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보증금 대출 서비스가 있어 탈수급의 경우 임대보증금 부담이 매우 큼.
  -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서비스를 받는데 탈수급할 경우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

#### □ 서울 사회복지관

- 탈수급의 의지가 없는 사례
  - 한부모-자녀 세대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해 장기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임.
- 탈수급의 의지가 없는 이유
  - 위 사례의 경우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취업 일자리를 가질 수 없고,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비보다 수급비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탈수급의 의지를 갖지 않는 이유가 됨. 오래도록 풀타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수입원의 한계가 있고 이는 생활에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

- 탈수급 의지가 약한 경우
  - 희망 없음/의지 부족.
  - 고립 상태로 대화 상대가 없음.
  - 전문성 부족.
  - 구체적인 정보 부족.
  - 고령으로 건강 회복에 대한 자신감 좌절.
  - 중대질환으로 건강 회복 좌절.
  -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 경기 고양시

- 충분하진 않지만 수급권으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짐.
- 수급권을 벗어나도 그 수준을 많이 상회하는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의 전문성이 없음.
- 스스로의 건강, 직업능력, 의지가 부족하고 본인의 수급권 탈피를 위해 노력하다가 실패할 경우 더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함.

□ 경기 광주시

- 탈수급의 상태보다 수급의 상태가 더 이익이 되는 경우
  - 사례: 수급자인 A 씨는 불의의 사고로 장기적인 수입 중단의 상태에 있었으나, 치료를 통하여 신체가 많이 회복되었음. 지인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으나, 근로소득보다 수급액이 (일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취업을 선택하지 않고, 주민센터에도 신체 회복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결심함.
- 공적 영역의 돌봄에 의존적 태도를 지니는 경우
  - 사례: 수급자 B 씨는 자녀가 있으나 근로·부양능력이 미흡하여 공적부조를

받고 있었음. 최근 어렵지만 생활비를 보내 주겠다고 자녀가 연락하였으나, 부담스러운 마음과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음. 사실 B 씨는 주민센터에서 수급비도 주고, 정기적으로 상담해 주며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때때로 후원자가 나타날 때 물품을 지급해 주는 것 등 여러 자원 이용에 더 의지하고 있고, 수급자인 것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음.

#### □ 인천 부평구

- 친모와 청년 아들의 2인 가족으로 장기수급자임.
- 친모와 아들은 약을 복용하며 근로를 할 수 있지만, 공공부조와 근로를 통한 임금을 비교하면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함.
- 이유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받는 생계급여, 계절별로 지원되는 밑반찬 및 김장 김치, 전기세 등 공과금 할인, 의료급여, 문화누리카드 등 복지 혜택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입임대 등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고생고생하며 일을 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마음 편히 놀면서 살 수 있는 장기수급자를 택함.

#### □ 인천 자활센터

- 경력 단절과 많은 나이로 인해, 요즘 시대는 젊은 청년들도 구직활동이 힘들다고 하니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음.

#### □ 부산 남구

- 근로를 해도 소득보장이 되지 않음.
  - 2인 이상의 가구원 중 1인이 자활근로를 하여도 탈수급이 안 되는 소득.
  - 1인 세대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탈수급을 우려해서 일정 기간 그만두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다시 자활에 참여하여 소득 조정(본인 스스로).

○ 근로를 하는 소득이나 생계비 지원을 받는 소득이나 비슷비슷함.

- 자활근로 참여 소득이나 생계비 지원 소득이나 비슷함.
- 또한 일용직으로 간간이 근로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일하면서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악용함(최근에 베이비 박스 목사 사례).

□ 광주 광산구

○ 본인이 탈수급을 하더라도 현재 기초수급자로 복지급여를 받는 것보다 나아진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수급을 탈피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함.

□ 충남 서천군

○ 알코올중독 50세, 남, 단독 세대, 급여 월 50여만 원 수령 중- 출가한 딸 있음. 알코올중독으로 가족관계 원활하지 않음. 주로 생계비를 가지고 생활 유지, 탈수급 의지 전혀 없고 알코올을 조정하면 취업이 가능하나 중독 생활이 길어져 의지가 전혀 없음. 자녀 어렸을 때 이혼으로 출가한 딸과 전화 통화는 가능하나 딸이 통화를 거부함.

- 농촌에서 주변 큰아버지 사촌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졌으나 알코올중독이 지속됨에 따라 관계가 소원해지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이나 급여 지원 이전에는 자주 관공서에 출입하여 급여가 적다고 하소연을 많이 함. 20일 이후 10여 일은 관공서 내방 없음.
- 최근 집 안에 풀이 많다고 예초기 작업을 해 달라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움. 연령과 건강 상태는 농촌 일손으로 가능하나 자가가 있고 주변에 의식주 지원이 있어 생계급여로 음주 생활 중임.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면 알코올중독으로 병원 입·퇴소가 예상됨.
-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열악한 상태로 기타 민간에서 지원되는 후원 품들이 다수 지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인은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지원되는 밑반찬도 지원받기를 희망함.

## □ 경북 안동시

- 장기수급자로 있는 경우는 대체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탈수급을 하여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약하고 적극적인 경제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는 탈수급을 할 수가 없음. 알코올중독이나 기타 게으름으로 인해 탈수급이 어렵다고 생각함.

## □ 경남 산청군

- 1990년대에 부모, 자녀 A 씨(초등학생) 가구가 생활보호법일 때부터 보장을 받았으며, 2019년 현재까지도 부모는 사망하고 그 자녀 A 씨가 30대(미혼, 알코올중독) 1인 가구로 생활하면서 수급자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음. 어릴 때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으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여 타 지역으로 취업을 갔으나 저임금 등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귀촌하여 여전히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음. 1인 가구인 경우 알코올중독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결정되어 지속적인 보장을 받고 있음. 근로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되면 탈수급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속 보장받기 위해, 즉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 현재의 생활을 지속하고 있음.
- 대부분의 수급자가 재산으로 인하여 수급이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혹은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음. 원래부터 재산이 없는 상태이며, 생활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장기적으로 수급자가 되면 거기에 안착하게 되어 자립 의지가 줄어들음.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소득이 높고 실제 부양할 수 있으면 탈수급할 여지가 큰데, 어중간한 정도의 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기보다는 조금 어렵더라도 낮지만 적절한 수준의 소득과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리며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어릴 때부터 수급자를 하면서 그 조건들을 알기 때문에 수급자로 지속함.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없음 판정을 받기 위해 노력함(예: 출가한 딸인 경우 시부모와 주소를 같이 둔다든지 하여 부양능력 없음 판정을 받음).

□ 경남 의령군

- 맞춤형 복지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 금융 등의 환산액)이 증가하기가 어려움.
  - 부양의무자도 생활이 나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음.
  - 부양의무자도 복지급여를 받으려는 현상이 있음.

□ 전북 완산구

- 노동시장의 침체로 전문적인 고소득 일자리 취업이 어려워 자립 여건이 악화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업 기회 제한.
  - 일용근로 일자리 감소 등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워 수급권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있음.
- 장기 불황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심화되어 자립 여건이 악화됨.
  - 임차료, 인건비, 카드 수수료 인상 등에 따른 경영난 심화.
  - 창업 여건의 악화로 수급권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있음.
- 정부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이기에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한 오래 지원을 받기를 원하며 탈수급 의지가 약함.
- 만성적인 질환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으며, 굳이 스스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생계비 등이 지급되니 본인 스스로가 근로능력 및 근로 의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의 복지병 발생.

□ 전북 장수군

- 현실에 안주하고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만족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
  -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고, 그런 혜택과 서비스를 포기할 수 없을뿐더러 소득활동을 하여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는 사례들이 있음.

## □ 제주 제주시

- 수급자 가정에 대한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지원이 해마다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어 수급자 가정에서 이러한 혜택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 수급자들 개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거짓 또는 허위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지켜 나가게 해야 할 것임.
- 또 수급자 관련 업무를 보다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복지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신뢰와 안전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임.

## 제2절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1. 장기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장기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서울 광진구 (1)

- 근로 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 근로능력자는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 소득공제하고 탈수급 후 탈수급 장려금 지급.

## □ 서울 광진구 (2)

- 사회보장급여 총액제 실시: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 가구의 경우 급여 총액제 시행으로 연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액을 정하여 당사자의 사용 계획에 의하여 신청받아 급여를 지급하고, 총액 지급 완료 시 보장 중지.

□ 서울 사회복지관

- 사회적 제도 안에 간병제도를 예산의 구애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탈수급 조건에 있어 경제적 영역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봄. 수급 유지를 하고 있지만, 현재 수급 지원을 받으면서 탈수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싶으나, 탈수급 노력과 함께 소득이 조금만 발생해도 탈락하는 형태의 수급 지원 구조가 문제임.
- 수급이 유지되면서, 탈수급을 위해 노력 중(예: 아르바이트 형태의 일, 바리스타 업무 등)일 때 기한을 한정해 두고 탈수급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현재 시행 중인 자산형 지원 사업(서울시 사업)의 활성화.
- 자활제도의 다양화를 통한 탈수급 확대.

□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

- 탈수급 프로그램
  - 양질의 구직활동
  - 건강 회복 프로그램
  -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 부양 가능한 친인척 지원 개발

□ 경기 고양시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 경기 광주시

- 적극적인 상담 서비스
  - 자활 동기 부여
  - 직업·역량·육구 상담
  - 수입 또는 재무 계획 상담, 개인희생에 대한 정보 제공

-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자활 프로그램
  - 직업훈련의 쉬운 접근 필요
  - 인큐베이팅
  - 취업 알선: 1회성이 아닌 사후관리 또는 재알선의 기회 필요
- 미성년 가족원 지원: 탈수급이 가능한 환경으로의 전환
  - 교육 지원
  - 장학제도
  - 진로와 취업 알선

□ 인천 부평구

- 희망키움통장: 개인과 국가의 1:1 매칭 저축
- 반기별 확인 조사: 수급자의 소득 및 부양의무자 능력을 평가

□ 인천 자활센터

- 근로 방해 요소 인식 교육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장기수급자로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혜택과 함께 근로의 기회까지 제공하면서 자립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함.

□ 부산 남구

- 근로소득보장
- 성공적인 자활사업 참여
- 특례(의료, 자활 등)

□ 광주 광산구

- 자활과 같은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야 함.
  - 근로기간 동안 급여액이 삭감되지 않는다거나, 삭감되더라도 그 정도가 크

지 않도록 해 근로 의지를 고취해야 함.

- 수급자 세대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자립할 경우(소득 발생 시) 일정 기간(최소 5년)은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제외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면제가 필요함.

□ 충남 서천군

-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나 농어촌 고령과 질병, 장애 등으로 수급자가 많은 지역은 탈수급이 어려우므로 특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떠오르지 않음.

□ 경북 안동시

- 근로능력이 있으나 미취업한 경우, 생업자금 등이 없어 생활하기 어려운 세대 또는 일시적인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조건부수급자로 만들어 자활지원센터에서 노동이나 기타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
- 취업도 도와주고 근로를 통해 생산적인 물품을 만들거나 작업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자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가 있음.

□ 경남 산청군

- 탈수급을 위해서는 근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적정 수준의 소득 유지가 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함. 또한 근로능력에 맞는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
- 자활장려금이 신설되고 소득공제도 있지만, 기본소득 개념의 생계비를 별도로 주고 소득활동을 해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면 일을 하려는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함.
- 탈수급을 하더라도 몇 년간은 기본소득 개념의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면 탈수급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됨.

## □ 경남 의령군

- 장애, 질병 등 근로능력을 상실한 수급자에게는 충분 급여를 통해 사회안전망 유지.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등은 자활공동체 활성화(직업능력 배양), 공공 기관 및 기업체에 의무적 조립, 물품, 부업 등을 지원함. 자활 인건비 등 지원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재료 현물을 제공함.
  - 예) 자동차 세차장 운영에 조건부수급자 참여 등
  - 예) 종이 포장, 수저 포장 등 단순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부업

## □ 전북 완산구

- 탈수급이 가능한 창업 프로그램 강화
  - 탈수급을 위한 획기적인 창업 프로그램 도입.
    -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의 도입 및 훈련 프로그램 실시.
- 탈수급이 가능한 자활사업 실시
  -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자활사업의 도입 및 지속 추진.
- 지속적인 전문 상담 프로그램 실시
  - 탈수급을 위한 전문가의 지속적인 상담 실시.
    - 조건부수급자 및 근로능력자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실시로 탈수급 의식 함양.
- 공공형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 장기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제공.
  - 예) I got everything 카페[관공서 내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덕진구청)].

## □ 전북 장수군

-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 제공

- 수급자의 수혜를 줄이고 특히 중복 수혜를 줄여서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야 함.

□ 제주 제주시

- 실제로 탈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 본인이 탈수급을 원할 경우 그동안 받아 오던 혜택(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기간을 정하여 중지할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예를 들어 생계 및 의료급여 등은 곧바로 중지되더라도 학생인 자녀들에 대한 혜택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어떻게든 탈수급으로 인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함.
- 또 수급자들에 대한 변호사 등을 통한 정기적인 법률 교육도 필요함.
  - 그랬을 때 거짓과 허위로 인한 책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임.

## 2. 기초보장제도 개선 방향

■ 기초보장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 서울 광진구 (1)

- 문제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더 높은 수급자가 주거급여를 더 많이 받아 임차보증금이 낮은 수급자의 불만족이 생기고 보증금 환산 월차임은 실제로 임차료 보전이 되지 못함.
- 개선 방향: 보증금의 월 환산액 방법 개선.

## □ 서울 광진구 (2)

- 기초의료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 재산 등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존하여 선정하고 있어 실제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소득 신고를 기피하고 의료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및 오남용 사례가 다수 있음.
  - 개선 방향: 근로능력자의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재정비 필요.
-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부정수급 전담 기구 필요.
- 저소득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분리 보호 방안 적극 검토.

## □ 서울 사회복지관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시행이 기존 기초보장제도와 비교해 볼 때 수급자들의 욕구를 감안한 시행인 것은 나아진 점이라고 생각됨.
- 또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는 것은 정책,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었음.
  - 그러나 현재 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단순히 완화시킨 것일 뿐, 부양의무자의 부양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수급자 가장으로서 노력하며 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생각됨.
- 수급자들에게 탈수급 의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제도가 기존에 시행 중이긴 하지만, 자산형성제도와 같은 탈수급 유인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됨. 최저생계보호 수준에서 일상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수준 도달까지의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

-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 다양한 원인과 상황으로 장기수급제로 몰입되고 있음.
  - 금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기초보장제도의 향후 나아갈 방향

- 구직을 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건강 회복을 위한 건강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함.
  - 중증 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운동.

□ 경기 고양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통합하여 관리하고, 기존에 의료급여에 투입되던 인력과 재원을 수급권자의 자활 및 소득 향상을 위한 분야에 투입.
- 고령의 노인세대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강화 및 기본소득제도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단계적 폐지.

□ 경기 광주시

- 생활 밀착형 사례관리와 이를 위한 인력의 확충 필요.
- 사례에 맞는 현실적인 맞춤형 자원 연계 필요.
- 기초보장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축소 방안 모색.
- 제도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의무화.
- 근로가능 대상자에 대해 자활에 대한 계획적 접근과 상담, 개입 계획이 필요함.
- 근로 동기 부여, 취업, 재무 관리 등 적극적인 관리 제도가 필요함.
- 근로를 위한 실용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포함.
-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대상자 숙출 및 신고 제도 도입.

□ 인천 부평구

- 부정수급자를 조사할 수 있는 경찰과 같은 권한 필요.
  - 부정수급자가 아무리 의심되고 혹은 증거가 있어도 이를 철저히 조사할 수

없고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는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막지 못함.

#### □ 인천 자활센터

- 자활센터의 실무자로 자활 참여 기간 제한이 있는데, 종료 후에도 다시 재참여 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왜 기간 제한을 두었는지 모르겠음.
- 만 65세 이상자는 희망하면 자활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막상 참여하더라도 근로가 힘들어 출퇴근만 하고, 앉아서 놀면서 점심만 드시고 퇴근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음. 1인 생계비보다 자활급여가 2배 이상 많다 보니 65세 이상이 희망 재참여로 오는 경우가 많음.

#### □ 광주 광산구

- 자동차 기준의 개선 필요
  - 수급자 자동차 기준 1600cc, 장애인 차량 기준 2000cc 등은 기초수급자의 중·대형차 보유에 대한 국민 정서의 반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요즘 엔진 다운사이징으로 1500cc의 중형차도 생산이 되고 소형 수입차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 단순히 자동차 배기량으로 수급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따라서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보유해야 하는 수급자의 차량 보유에 대한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반감을 해소시킬 만한 기준의 변화가 필요함.
  - 차량의 크기(준중형 이하), 차량 가액, 수입차에 대한 가중치 적용 등 적절한 기준의 개선이 필요함.
- 수급자 등 요보호 대상자 관리 체계 개선 필요
  - 수급자가 보호 중지 되었을 경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넘어와 관리하게 되어 있음.
  -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로 관리되면서 사유에 따라 긴급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됨.
  - 긴급지원 기간에 그동안 받았던 수급생계비보다 긴급지원비가 많은 경우가 발생함.

- 긴급지원을 받는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수급 중지 사유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 다시 수급자가 됨.

#### □ 부산 남구

##### ○ 자활사업에 투자

-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으로 보는 자활사업이 아니라 정말 자활할 수 있는 사업.
  - 공공기관의 틈새 카페: 요즘 관공서에 없어서는 안 될 휴게시설을 자활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틈새를 공략한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
  - 일자리사업이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같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 실제로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함. 자활이라는 말만으로도 이미 공공근로 수준의 소득만 보장하는, 억지로 일해야만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미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자활사업 필요.

##### ○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

- 서비스 금액의 총액제: 조건부수급자들로 분류되는 근로가능자에 대해 65세 이전에 받을 수 있는 생계비 총액으로 적절한 시기에 지원받도록 함.

#### □ 충남 서천군

- 2000년대 시작된 기초보장제도는 현재 현금 급여로 비교적 안정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음(단, 농어촌 독거노인 가구 등에 해당됨. 자녀 양육이나 질병은 별도임).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인 경우 장애수당과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포함하여 1인 100여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도 많음.
  - 단순 빈곤가구의 지원은 안정화되었으며, 이에 반해 알코올중독과 정신장애, 중증 질환자에 대한 새로운 집중적인 체계의 지원이 필요함.

## □ 경남 산청군

-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 1채에 대하여는 고가이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 다른 재산은 처분이 가능하지만 주택 처분은 가혹하다고 생각함. 주택만 있으면서 가액이 높을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생활하다가 모두 소진되고 나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모순이 있음.
- 기초연금의 경우 금액을 올리기보다는 소득 하위 70%를 50%로 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기초연금액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소득 하위 50% 정도의 노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함.
  - 재산, 소득 기준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많음.

## □ 경남 의령군

- 맞춤형 복지(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용어 그대로 각 개인이나 가구에 필요한 복지급여 및 현물 상담, 연계 지원이 필요함.
- 예) 의료비가 많이 드는 가구는 의료비 지원을 충분히 하고, 기타급여는 필요한 만큼만 함.
  - 4인 가구로 부(장애 심함, 만성질환), 모(식당 일), 자녀 1(대학생), 자녀 2(고등학생)에게 지금은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장애수당, 교육비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주고 있음.
  - 그러나 탈수급을 위해서는 부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및 시설, 활동 지원 등, 모는 식당일을 하지만 장려금, 매칭적금, 심리상담 등과 함께 생계비-소득-장려금-적금-보험-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계가 필요함. 자녀 1은 취업 연계 집중 등, 자녀 2는 교육지원 강화 등 개별 가구원에게 충분한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요함.

□ 전북 완산구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 및 시행.
  - 24세 이하,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에 대한 근로 유인 공제제도 외에 근로능력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책 확대.
  - 근로 유인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수립으로 탈수급을 유도해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초과되지 않게 소득활동을 하면서 수급권 내에 안주하도록 만드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

□ 전북 장수군

- 포플리즘성 복지를 지양하고 경제 순환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함.
  - 탈수급자에 대한 보다 많은 혜택과 서비스 제공.

□ 제주 제주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계속해서 변경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 특히, 지침 중에 일부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만들어 조금씩 수정함으로써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기도 함. 본 제도 이외에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제도 역시 세분화되고 있는 실정임.
-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꾸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세분화해서 추진하는 것과 폭넓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해 보고 시행했으면 좋겠음.
- 각종 제도가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세분화되고, 그로 인해 추가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 충원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실정임.
- 결국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단순 업무가 지속적으로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복잡한 업무로 바뀌고 있음.
- 특히, 복지제도가 전에는 선별적 복지였는데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을 것임.

### 3. 기타 개선 사항

▣ 위 질문 이외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세요.

#### □ 서울 사회복지관

-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정책,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제시가 필요함.

#### □ 경기 광주시

- 탈수급을 위한 장기적·지속적 과정 필요
  - 장기수급자가 탈수급자가 되는 것은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움. 그래서 탈수급 과정은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치밀한 개입 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 탈수급자 유지를 위한 노력 필요
  - 탈수급자가 다시 수급자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과정에서의 각 단계를 탄탄하게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함.

#### □ 인천 부평구

- 우리나라 기초보장제도는 대상자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고 제공하는 공무원들의 권한이 적음. 그래서 대상자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등 악성 민원인에게 피해를 받아도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과 지침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움.

#### □ 대전 동구

- 시장 경쟁력이 미약한 취약계층의 전원 고용 책임
  - 자치단체에서는 조건부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자활 일자리 요청 시 고용 가능한 자활 일자리 발굴.
  -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한 대상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발굴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모든 고용을 책임져야 할 것임.

○ 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 및 폐지, 부양의무자(자녀)의 아들과 딸의 부양 비율 즉시 폐지.

- 2000년 제정된 법은 20여 년이 흐른 현재 많은 부분이 수정 보완되어야 함.

○ 맞춤형 복지의 조기 정착 및 성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 □ 부산 남구

○ 자활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시켜 자활이 가능한 서비스로 발전시키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최대한의 지원으로 변경.

#### □ 충남 서천군

○ 중증장애 단독가구 100여만 원 급여- 급여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100여만 원 소비 안 됨.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항상 이야기되는 알코올중독과 정신장애는 지자체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담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 경남 산청군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중 자동차에 대한 조건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완화는 많이 되었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 교통이 불편하여 차량이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상태임에도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현실임.

○ 금융재산의 경우 5.26%는 이자율 대비 너무 높음.

○ 우리나라 각종 복지유형별 선정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 제주시

○ 정부가 바뀌거나 장관 등이 바뀌면 새로운 시책이라고 해서 만들어 내고 있는데, 과연 새로운 시책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

- 시책 명칭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인 것이 많은 것 같음.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바뀌었는데, 대체 무엇이 바뀐 것인지 이런 소모적인 일들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보건복지부에서 정부가 바뀌어도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 외에 바뀌는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음.
- 전 정부에서 시행한 좋은 시책은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는 것인지, 정부가 바뀌고 명칭이 바뀌어도 대상자는 동일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제 4 장

##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제1절 사각지대 발생 원인

제2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홍보 방안

제3절 부정수급 발생 유형



# 4

##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

### 제1절 사각지대 발생 원인

#### ▣ 사각지대 발생 이유

- ▶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제도 설계상 선별적인 특징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음으로 높음(〈표 4-1〉 참조).

〈표 4-1〉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

구분	복지제도 전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합계
	노인	비노인	노인	비노인	노인	
①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6	5	9	4	7	31
② 대상자가 신청했어도 관리 및 행정상의 문제(오류 및 과실 등)로 수급받지 못해	1	1	1	1	0	4
③ 대상자의 욕구에 비해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또는 급여) 수준이 낮아서	2	3	2	4	0	11
④ 제도 설계(제한적 대상, 선별적 적용 범위 등)의 문제	4	4	2	4	4	18
합계	13	13	14	13	11	64

자료: 제3차 서면의견 취합 자료.

- ▶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없거나, 대상자가 몰라서이거나,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표 4-2〉 참조).

〈표 4-2〉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

구분	복지제도 전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연금	합계
	노인	비노인	노인	비노인	노인	
① 대상자가 몰라서	4	0	3	2	2	11
② 신청 절차 및 선정 과정이 복잡해서	3	1	2	1	1	8
③ 자녀 등 가족 피해 우려	1	0	3	0	0	4
④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	0	5	1	2	2	10
⑤ 사회적 낙인 우려	0	0	0	1	0	1
⑥ 제공받게 될 서비스(또는 급여) 수준이 낮아서	0	0	0	0	0	0
⑦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급여)가 없어서	3	2	2	1	4	12
⑧ 서비스(급여) 제공기관이 멀어서	0	0	0	0	0	0
⑨ 그 외	0	0	0	0	0	0
합계	11	8	11	7	9	46

자료: 제3차 서면의견 취합 자료.

■ 사각지대 발생 사유와 비신청 사유에 대한 의견

□ 제주 제주시 (1)

○ 사각지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임.

□ 충남 서천군

○ 찾아가는 방문 상담, 어려운 이웃 발굴, 복지이장제도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각종 회의 시, 각 마을 회관 및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려운 이웃 발굴과 복지제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

○ 기존 저소득층대상 선택적 복지개념보다 기초연금,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복지 제도로 인한 보편적 복지로 복지가 빈곤층 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주민들에게 인식됨.

- 경로당 복지제도 교육을 실시하면 어르신들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표현함. 기초연금수령과 함께 다양한 복지제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식사, 교육, 함께하는 취미활동 등)이 있는 경로당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예시) 고령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를 통해 안정된 소득으로 자녀에게 용돈 안 받는다고 표현함.

▣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관리 및 행정상의 문제(오류 및 과실 등)’ 유형과, 원인 및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 서울 광진구 (1)

- 재산이나 소득공제 범위가 너무 넓고 복잡함(부양의무자 월세, 교육비 등).
  -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 시 대학생 학비, 의료비, 월세, 가구 특성 등 여러 가지 세부 기준이 있으나 복잡하여 공무원의 안내(관리)가 어려우며, 수급권자 자신도 부양의무자 가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적용키 어려움.

□ 서울 광진구 (2)

- 문제: 초기 상담 시 피상담자의 낙인감 초래로 사각지대가 발생.
- 원인: 초기 상담 시 가장 많이 노출되는 소득 및 재산액과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등 현재 빈곤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비판하려는 상담 태도로 인해 낙인감이 생기고 서비스 신청 및 재상담에 어려움이 발생함.
- 해결 방안: 초기 상담 시 상담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독립적인 상담실은 물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역량 향상 노력이 필요함.

□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

- 대상자에게 미통지 등의 과실

- 대상자 선정 시 행정상 오류로 인해 안내문 미발송.
- 대상자 선정 시 주소 불명지로 안내문 발송.
  - 대상자에게 통지 등의 미도착 등의 과실.

○ 대상자 선정 시 행정상 오류

- 유사 이름, 주소 번지 등의 착오로 행정상 대상자 선정 오류.

○ 과오나 행정상 오류 해결 방안

- 사회보장원에서 입력 오류 시 사전에 점검,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주소 불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우선 필요함.
- 업무 과실 등에 해당하는 공무원 대한 명확한 행정지도가 필요함.
- 해당 담당 인원을 확보해야 함.

□ 경기 고양시

- 복지 사각지대는 제도의 사각지대, 정보의 사각지대로 나눌 수 있음. 관리 및 행정상의 문제(오류 및 과실)는 표현 그대로 오류 및 과실이기에 그것 자체를 줄이는 노력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적절한 업무량과 관리 대상이 주어지거나,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가 보다 주의를 기울이면 줄어들 수 있음.

○ 복지제도 홍보의 한계(정보의 사각지대)

- 복지제도 '홍보'가 아닌 복지 '교육'으로의 접근이 필요함.
- 복지제도 홍보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으나 홍보에 한계가 있음. 장기적인 계획으로 학교교육을 통해 직업교육과 같은 차원에서 복지제도 교육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지식을 전 국민이 일정 정도 가지게 해야 함.

○ 신청주의의 한계(제도의 사각지대)

- 해결 방안: 행정관청 직권신청 후 서비스 수혜 여부를 당사자가 선택할 기회 제공.
  - 이 경우 금융재산 등 본인의 동의를 없을 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미반영된 상태로 조사 결과가 도출됨.

- 금융조사 이전 자료의 상태에서 당사자와 직접 서비스 수혜 여부 확인 후 금융재산 조사 동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 제공.

#### □ 경기 광주시

##### ○ 부양의무자

- 실질적인 부양의무자와 행정상의 부양의무자의 구분이 모호함.
  - 전통 사회에서의 빈번하게 일어났던, 호적상의 자녀와 실질적 자녀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발생함(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자녀가 있음에도 행정상의 이유로 수급권자로 책정되는 노인세대가 발생함).
- 부양 기피 의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미실시
  - 관계 단절과 부양 기피의 경우에도 부양의무 포기 서류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음. 그럼에도 대상자가 수급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부양 의무 포기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절차가 필요함.

##### ○ 소득, 재산 기준

- 행정상 나타나는 채무 이외에 책정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함.

#### □ 인천 부평구

##### ○ 인력 부족과 과(팀)와 과(팀), 과(팀)와 행정복지센터의 당사자 관리 문제.

- 예를 들어, 생계급여가 중지되면 다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관리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연계를 해서 다른 민간 복지 혹은 긴급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이를 행하지 않거나 과(팀)와 행정복지센터 등의 업무 연결 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인천 자활센터

- 관리 및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된 경우는 수급의 요건이 되나 본인 명의 차를 소유한 경우이며, 차의 연식과 기종에 상관없이 경차 기준에서 벗어나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많이 억울해함.
-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니고 가족(친인척) 명의로 본인 차를 운행하고 다니고 다님.

□ 광주 광산구

○ 소득 재산 반영 오류

- 소득 재산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 소득활동을 하던 수급자(4대보험 미가입)가 부상, 질병 등의 이유로 실직을 하였으나 소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가 미지급됨. 몇 개월 동안 가구 내 소득이 끊겨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채가 발생하게 되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움.
  - 사적 이전 소득도 한번 등록이 되면 통장 거래 내역을 매월 조사하기 어려워 사적 이전 소득이 없음에도 계속 소득이 반영되어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충남 서천군

- 관리 및 행정상의 문제(오류 및 과실 등): 대부분 복지제도는 사회복지통합망에 의해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음,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여 신규 공무원의 업무 숙지 미흡으로 특례 등의 적용을 못 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미미한 경우임.
- 현재 일선에서는 복지직 1명이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경험이 많은 복지직이 근무하고 있어 행정상 오류는 발견하기 어려움. 복지 업무에 대해서 실수나 고실은 거의 사라짐.
- 행정상의 문제 대부분은 신규 업무 추진자의 업무 숙지 미흡이나 실수로 발생함.
  - 예를 들어 신청 접수 이후 지자체 상신 지연 등.

## □ 경북 안동시

- 개인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가 강조되다 보니 당사자들이 몰라서 또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관공서를 찾아오지 않는 경우에 주로 사각지대가 발생함. 행복이음 등 자료가 오기는 하나 숨겨진 사채라든지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주위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아파트나 다세대 등 폐쇄적인 주거 공간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움.
  - 얼마 전 관내 소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친구와 술을 먹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살하겠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와 방문해 보니 사채 등을 써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채 때문에 상담한 경우 있었음. 이런 경우는 행복이음에 나타나지도 않고 본인이 오지 않고 주위의 신고가 없으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음.

## □ 경남 산청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노인 사각지대 발생 사유
  - 신청을 하지만 선정 기준을 초과함.
    - 실제 생활 및 재산, 소득 상황은 선정 기준에 포함되나 승용차의 100% 소득환산율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농촌에서는 교통이 불편하여 차량이 필수품으로 인식되는 상황임에도 비노인인 경우 차량이 100% 환산되는 것에 대하여 이해 불가하다는 의견임(차량 용도: 일상생활을 위한 교통수단, 자녀 통학 등).
  - 생활 수준(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에 있어서 젊은 층과 노년층 간 인식 차이가 발생함.
    -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수업료 외 학원비 등 양육비가 노인층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더 소요됨에도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됨. 즉,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생활 수준이 젊은 층과 노년층 간에 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지출 면에서도 자녀 양육 등 젊은 층이 본인에 대해서보다 자녀에 대하여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임(생계급여를 받는 노인가구인 경우 노인 본인들만의 지출로 사용). 그러므로 젊은 층

은 자녀 양육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소득인정액'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선정 기준 간에는 많은 갭이 발생하여 불만이 있음.

□ 전북 임실군

- 복지 인원 부족으로 복지제도 복잡성에 대한 대응이 미비해 복지급여 미신청이 발생함.
  - 우리 군은 노인 인구가 30% 이상인 농촌 지역으로 복지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신청·선정 과정의 복잡성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함에도 복지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제도를 잘 아는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사람이 보다 더 많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복지를 실현해야 함.
  - 통합조사팀, 희망복지팀, 주거급여사업팀, 읍면 복지 담당자들이 팀이 되어 사각지대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함.

□ 전북 장수군

- 사각지대 사례 원인
  - 사회적 낙인으로 생각되어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서류의 복잡성이나 정보 측면에서 잘 알지 못할 경우 신청을 못 하는 경우.
  - 신청하여도 법의 미비로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
    -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에 노력해야 함.

□ 제주 제주시 (1)

- 사각지대라는 용어가 각 제도에 따라 다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하여 많은 사회복지 관련 법의 사각지대가 모두 다른 상황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사각지대는 아동보호법상의 사각지대가 아니며 특히 기초연금 대상자의 사각지대와는 소득의 격차가 매우 심함.
- 2019년 기준중위소득을 중심으로 기준중위소득 30%(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4%(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50%(교육급여 &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2%(한부모(급여)), 기준중위소득 60%(한부모(증명서), 청소년 한부모(급여)), 기준중위소득 72%(청소년 한부모(증명서)), 기준중위소득 75%(국비 긴급지원), 기준중위소득 80%(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등 기준중위소득 80% 범위 안의 각종 지원 가능 제도가 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건강보험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법과 정책이 난무함. 이보다 더 기준 소득이 완화된 기초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나열하면 복지 사각지대가 과연 어느 구간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음.
- 더욱이 제도마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적용률 등이 모두 상이해 기준중위소득 150%도 복지 사각지대에 속할 수 있음.
- 복지정책에 대해 총괄적인 기준과 그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의 올바른 정의가 필요함.

#### □ 제주 제주시 (2)

##### ○ 기초연금

-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 과거에 공무원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수급한 사실 때문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았던 연금은 이미 오래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사용되어 현재는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나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은 가능하나 기초연금수급은 불가능한 상태임.
-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법 또는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에서 노인에게 가장 수치심(또는 스티그마)을 발생시키는 제도(프로그램) 및 그 이유에 대한 의견

□ 서울 광진구 (1)

○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제도

- 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자녀, 며느리, 사위 등) 조사 동의서 받는 것을 힘들어함(결혼한 자녀의 가정생활에 피해를 줄까 우려하거나, 관계가 소원한 며느리나 사위에게 수치심을 느껴 급여를 포기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제출).

□ 서울 광진구 (2)

○ 노인일자리 동환경정비사업

-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기초연금수급자이지만 노인들에게는 아직도 노인일 자리는 저소득 노인이 참여자라는 인식이 많음.
- 노인일자리 동환경정비사업의 참여 장소는 노인이 거주하는 동네이다 보니 주변 이웃들에게 알려져 참여자 스스로 사회적 낙인감이 큼.

□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족해체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인터뷰

-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이지만 자녀와 경제적 단절 및 가족 해체, 자신의 가족사를 입증하는 것이 노인 대상자에게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임.

□ 경기 고양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스티그마가 가장 심할 수 있음.

□ 경기 광주시

○ 무료급식

- 유료 이용 단체식에서 무료 이용 대상자가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동료 노인들 사이를 계급화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인천 부평구

○ 부양의무를 평가하는 공공부조: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 자식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 자식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싶지 않은 어르신들은 자식과 관련된 생계급여 등을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음.

□ 광주 광산구

○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 제출

- 대상자가 기초수급을 신청할 경우,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 즉 사위나 며느리의 금융동의서도 제출해야 함. 대부분의 노인은 자녀에게 피해가 갈 것을 두려워해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 제출을 가장 어려워함.

□ 충남 서천군

○ 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이유: 본인의 소득 및 재산과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 따른 낙인감으로 극빈층의 이미지가 있음.

□ 경북 안동시

○ 기초연금제도인 것 같음.

- 특히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고 나서 사정상 일시금으로 부득불 수령한 경우 (자녀의 사업이나 유학 등으로 일시금이 필요했던 부분 등)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오셨다가 대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무척 당황한 경우가 있었음. 하지만 벌어 놓은 재산 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다 날려서 어려운 노령을 보내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음.
-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안타까운 경우가 있음.

#### □ 경남 산청군

- 보편적 복지가 일반화되어 스티그마 발생은 없다고 생각됨. 복지제도로 인한 스티그마라기보다는 개인 상황에 의해 스티그마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있음.
  - 생활 형편이 중산층 이상이었으나 자녀의 사업 때문에 갑작스럽게 재산을 처분해 생활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경우, 본인의 재산이 빚보증으로 모두 처분된 경우, 젊었을 때 생활 형편이 중산층 이상이었으나 급격하게 어려워진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받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 사례가 있음.
  - 예전 10여 년 전에는 사회단체장을 하며 생활 형편도 좋았으나, 빚보증으로 재산이 모두 탕진되어 수급자로서 홀로 살아가는 노인이 남부끄럽다며 마을 사람을 피해 다니며 외출하기도 꺼릴 정도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 사례가 있음. 그러므로 특정 복지제도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환경 특성에 의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됨.

#### □ 전북 임실군

-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조사
  - 부양의무자 기피나 소재 불명으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녀들이 재산이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못 받고 있다는 설명을 할 때임.

#### □ 전북 장수군

- 기초생활수급자

- 부양의무자에게 버림받아 현 생활은 어려운 노인이 많으나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으로 탈락되는 사례가 많음.

□ 제주 제주시 (1)

○ 노인에게 가장 수치심을 일으키는 제도는 요양원 제도임.

- 노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요양원임.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사회에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 특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수급자의 경우 요양원은 무덤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일반 노인은 요양원에 입소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의지에 따라 퇴소하거나 일정 기간 외출 등을 통해 삶을 영위할 수 있음. 반면 기초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퇴소하는 경우는 없으며 외출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재로 거의 없는 상태임.
- 일반 노인과 수급자 노인이 필요시 사회에 나와 잠시라도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장기요양급여 중 일부를 외출 또는 단기간 타인의 거주지에 머물며 쓸 수 있는 급여가 필요할 것임.

□ 제주 제주시 (2)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및 조사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확인할 때 호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거나 사실관계를 물어볼 때 힘들어함(사실 확인 결과 허위로 답변한 경우도 있음).

## 제2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홍보 방안

- 사각지대 축소 또는 해소를 위해서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과적인 홍보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 1. 노인 대상 또는 노인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 □ 서울 광진구 (1)

- 노인 대상 1:1 대면홍보 및 비수급 노인 정기 안내
  - 65세 도래자 전수 방문 조사(서울시 시행 중),
  - 노인생활 실태 조사 인력을 확충하여 조사 대상을 비수급 노인 전수로 확대.

#### □ 서울 광진구 (2)

- 민간 복지 홍보대사 양성 및 교육
  - 노인층은 스스로 정보 습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과 많이 만나는 통반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

- 대국민 홍보
  - 다양한 대중매체(TV, 라디오, SNS) 등을 통한 정확한 내용 홍보.
  - 안내 책자, 홍보물 등으로 많은 대중에게 홍보.
  - 대상자에게 직접 홍보.
  - 해당 대상자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자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 발송.
- 대상자에게 직접 방문 후 설명
  - 해당 대상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설명.

□ 경기 고양시

- 노인지회,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 단체를 통한 홍보.
  -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노인복지사업 홍보(예: 각동에 여러 개씩 설치된 경로당에 다양한 노인복지제도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복지정보 안내 관련 활동을 시행할 수 있음).

□ 경기 광주시

- 통반장 개발 활동 활성화.
- 민간 자원 활용.
  - 도시가스 검침원 등.
- 임대인 신고 제도 마련.

□ 인천 부평구

- 노인복지관, 경로당, 공원 등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홍보.
- TV 광고.

□ 인천 자활센터

- TV 홍보, 찾아가는 커뮤니티 케어 홍보.

□ 광주 광산구

- 대상자 방문을 통한 홍보.
  - 노인돌보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를 통한 홍보.
  -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의 경우, 대부분 동주민센터를 거의 방문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따라서 대상자를 가정방문하는 노인돌보미, 장기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들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함.

□ 충남 서천군

-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찾아가는 복지 교육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많이 해소됨.
- 복지 사각지대 주변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중.
- 각종 회의 이장 및 복지이장을 통해 대대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려 노력 중.
- 현재 일선 읍면에서는 많은 노력(복지 직원 3명)을 기울이고 있으나 방문상담 시간이 길어지고 대부분 출장으로 내부 업무 시간이 부족함. 완성도 높은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펼치려면 인원 충원이 필요함.
-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실시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각지대 축소로 이어짐.

□ 경북 안동시

- 경로당이나 요양시설 등 어른들이 많이 보이는 곳이나 홀로 계시는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건강 체크 등을 함. 찾아가는 경로당 생활지도사가 노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홍보 등을 하고 있음.

□ 경남 산청군

- 복지관, 노인대학, 각 기관, 사회단체별 정기 및 임시 회의 시 홍보.
- 경로당 방문 설명회를 통한 홍보가 필요함.
- 마을별 경로당에 큰 글씨 복지 홍보물 게시.

□ 전북 임실군

- 노인일자리사업 및 재가복지서비스
  - 현장 밀착형 복지제도 홍보 필요.
  - 마을 통·이장과 복지 담당 연계.

□ 전북 장수군

○ 찾아가는 복지상담

- 각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제주 제주시 (1)

○ '대상자가 몰라서'라는 응답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노인 70%가 이미 제도를 알고 있음.
- 복지서비스를 모른다고는 할 수 없음.

○ 부양의무자 정보 확인에 대한 두려움

- 복지서비스 신청 시 자녀와 본인의 정보 공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부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자신이 현실적으로 부양받지 못한다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임.
- 해결 방안으로는 신청에 대한 홍보보다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사회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제주 제주시 (2)

○ TV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

- 노인들 중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거나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가정에도 TV는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광고를 제작하여 방송을 통하여 홍보.

## 2. 비노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 □ 서울 광진구 (1)

- 공중파 방송을 통한 홍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함.
  - 공공요금 체납자, 홀몸 청장년 가구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로 상담하였으나 기대만큼 사각지대를 발굴하지 못함(부재 등으로 대부분 개별상담이 어려움).
  - 안내문 등 개별 홍보도 무심히 넘기거나 그냥 폐기하는 경우가 많음.

### □ 서울 광진구 (2)

- 복지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미디어 홍보 강화
  - 복지서비스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 보편적 복지 정보 제공.

### □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

- 대국민 홍보
  - 다양한 대중매체(TV, 라디오, SNS)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 홍보.
  - 필요한 홍보물 안내 책자, 홍보물 등으로 많은 대중에게 홍보.
- 유명 SNS를 통해 젊은 대상자를 위한 맞춤 홍보.
- 대상자에게 직접 홍보
  - 해당 대상자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당 대상자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 발송.

### □ 경기 고양시

- 지방교육청과 협력하여 초·중·고등학교 특강, 학교사회복지사를 통한 복지제도 교육 등 실시.

□ 경기 광주시

- 어린이집, 학교의 적극적인 발굴.
  - 교사들의 관찰과 상담.
- 복지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 자신이 복지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능.

□ 인천 부평구

-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통해 가정통신문 발송.
- 대중교통(지하철) 정류장 등에 홍보.
-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는 연령층, 장애·독거 가구 등을 전산을 통해 확인하여 가정방문.
- TV 광고.

□ 인천 자활센터

- 현수막 홍보, TV 홍보.

□ 광주 광산구

-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 홈페이지, SNS,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
  - TV나 신문보다는 블로그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가 더 효과가 있음.

□ 충남 서천군

- 대대적인 활동과 홍보를 하고 있으나 대인관계 기피나 은둔형 생활을 하고 있는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지이장 등이 알려 줌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부양의무자나 제도권의 서비스 수준 관계로 보호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음.

- 각종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저소득층 발굴 필요.
-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복지교육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효과적임.
- 대중매체 및 인터넷 홍보도 적절히 필요함.

□ 경북 안동시

-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경로당 등에 찾아가 국민기초,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 관련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음.

□ 경남 산청군

- 교육급여와 같이 초·중·고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알림장'을 통한 신청 홍보 필요.
- 지자체별 복지 선정 기준 홍보 앱을 개발하여 홍보.
- 마을별 회의를 활성화하여 홍보(예전 마을마다 '반상회' 개최).

□ 전북 임실군

- 자활사업
  -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를 통한 홍보
    - 마을 통·이장과 복지 담당 연계.

□ 전북 장수군

-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
  - 주로 인적이 닿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분과 소재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

□ 제주 제주시 (1)

- 대상자가 몰라서 라는 응답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이 3명 이상 배치가 되어있음.
  - 맞춤형 복지팀이 2018년부터 거의 정상화되어 활동하고 있음.
  - 복지서비스를 모른다고는 할 수 없음.
- 근로능력자가 근로를 해야 한다는 귀찮음과 근로능력자가 국가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음.
  - 근로능력자이면서 복지서비스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를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근로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신청하지 않음. 한편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부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
  - 근로능력자가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함. 특히 근로능력자이면서 신청하지 않는 자는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복지 지원 근로능력자(취업자 등) 지원 매뉴얼을 만들어야 함.

□ 제주 제주시 (2)

- 노인 대상 또는 노인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생각함.

### 제3절 부정수급 발생 유형

- ▶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제공받는 사람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으며, 제공하는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다음으로 높음(〈표 4-3〉 참조).

〈표 4-3〉 부정수급 발생 유형

구분	복지제도 전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연금	합계
① 제공하는 사람의 고의로 발생	1	1	0	2
② 제공하는 사람의 실수(오류)로 발생	2	1	3	6
③ 제공받는 사람의 고의로 발생	7	11	6	24
④ 제공받는 사람의 실수로 발생	2		2	4
⑤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의 공모로 발생	0	0	0	0
⑥ 기타	1	2	2	5
합계	13	15	13	41

자료: 제3차 서면의견 취합 자료.

▣ 부정수급 발생 유형에 대한 의견

□ 제주 제주시 (1)

- 제공을 받으려는 사람이 이미 제도의 맹점을 아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다양한 대처 방법이 생겨나고 있음. 통장 사본에 부양의무자와 관계된 금융 정보가 일정 기간 입력되지 않는다면 부양의무자와의 단절로 결정됨. 부정수급을 고의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신과 부양의무자 간의 정보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스스로 당위성을 가짐. 이러한 부분이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 경남 산청군

- 제공받는 사람(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 각종 변동 사항 발생 시 신고의 의무를 인지하지 못함.

▣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정수급 유형

- ▶ 제공받는 사람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인식함(〈표 4-4〉 참조).

〈표 4-4〉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정수급 유형

구분	복지제도 전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연금	합계
① 제공하는 사람의 고의로 발생	1	1	1	3
② 제공하는 사람의 실수(오류)로 발생	2	2	1	5
③ 제공받는 사람의 고의로 발생	7	11	7	<b>25</b>
④ 제공받는 사람의 실수로 발생	2	0	1	3
⑤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의 공모로 발생	0	0	0	0
⑥ 기타	0	1	1	2
합계	12	15	11	38

자료: 제3차 서면의견 취합 자료.

#### □ 경남 산청군

- 제공받는 사람(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 각종 변동 사항 발생 시 신고의 의무를 인지하지 못함.

▣ 부정수급 관리 체계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시급한 문제

- ▶ 부정수급 관리 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한 정보 시스템 권한 미흡, 부정수급 전담 인력의 부족,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처리의 불공평을 우선적으로 인식함.

<표 4-5> 부정수급 관리 체계 개선 방향

구분	복지제도 전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합계
① 감사 업무와 부정수급 관리 업무의 모호한 업무 분장	1	0	0	1
② 부정수급 전담 인력의 부족	2	3	4	<b>9</b>
③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 분석을 통한 부정수급 관리 대상 하향식 정보 전달	0	0	1	1
④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한 정보 시스템 권한 미흡	3	4	4	<b>11</b>
⑤ 별도 전달체계(예: 교육청, 보훈청, LH 등)와 정보 교류 미비	1	0	0	1
⑥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처리의 불공평	4	3	2	<b>9</b>
⑦ 부정수급 적발로 인한 민원 및 인사상 불이익	2	3	1	6
⑧ 기타	1	1	1	3
합계	14	14	13	41

자료: 제3차 서면의견 취합 자료.

□ 충남 서천군

- 10여 년 전 사례로, 모친이 사망했음에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딸인 자녀가 공무원 신분으로 가족수당 및 기초연금을 5년 이상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음.
- 부정수급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및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함.

□ 인천 부평구

- ‘기타’: 수사권.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을 조사할 권한이 없음.

## ■ 부정수급 차단 및 감소를 위한 과제

- ▶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부정수급 관련 업무 담당 인력 확보와 관련 법적 근거 및 처벌 강화를 제시함.

〈표 4-6〉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제

구분	복지제도 전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연금	합계
① 부정수급 관련 법적 근거 및 처벌 강화	5	3	3	11
② 부정수급 관련 부처와 사업 부처 간 협업 및 정보 연계	2	1	2	5
③ 부정수급 관련 부처와 사업 부처 간 명확한 업무 분장	2	0	0	2
④ 부정수급 관련 업무 담당 인력 확보	3	8	2	13
⑤ 부정수급 관련 정보의 접근 권한 확대	1	2	3	6
⑥ 부정수급 적발의 성과 관리 체계	0	0	0	0
⑦ 부정수급 적발 관련 의사결정의 권한	0	0	0	0
⑧ 신고포상제도 확대	0	0	1	1
⑨ 기타	1	1	2	4
합계	14	15	13	42

자료: 제3차 서면의견 취합 자료.

### □ 충남 서천군

- 부정수급 관련 법적 근거 및 처벌 강화와 함께 명확한 업무 분장이나 인력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어 공무원들이 업무 미흡으로 부정수급 발굴의 부담과 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정된 업무 체계 지원이 필요함.

### □ 경남 산청군

- '기타': 수급자의 소득 변동 신고 지연.

### □ 제주 제주시 (2)

- '기타': 복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사법 경찰권 부여.

▣ 부정수급 차단 및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1. 복지제도 전반

□ 서울 광진구 (1)

- 부정수급 관련 부서와 사업 부서 간 협업 및 정보 연계
  - 자산 변동 시 해당 자산 변동 관련 업무 부서에서 복지제도 관련 부서로 변동 사항 발생 즉시 통보(예: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관련 정보 상호 연동).
  - 기초수급자 외 복지제도는 대상자의 인식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사료되어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서울 광진구 (2)

- 부정수급 관련 법적 근거 및 처벌 강화
  - 개선 방안: 복지서비스 신청자의 소득 재산 신고의 현실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소득: 자필 소득 신고의 근거 자료 제시 요청 등.

□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

- 부정수급 관련 부서와 사업 부처 간 명확한 업무 분장.
  - 본 기관은 아동을 전담하는 기관이므로 한 아동이 복지부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이 부분이 부정수급은 아니지만 동일 아동에 대한 부처별 중복 지원임.
  - 이와 유사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통합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한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해 보임. 단, 개인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것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함.

□ 경기 고양시

- 부정수급 관련 정보의 접근 권한 확대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부정수급 관련 정보에의 접근을 확대하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거나 이루어지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발견하여 부정수급 발생액을 줄이는 예방적 방법임.
- 부정수급 관련 처벌 강화, 신고 강화, 의사결정 강화들은 모두 예방적 방법이 아닌 사후적 방법이며, 본인이 의도치 않게 부족한 정보 등으로 인해 부정수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과도한 처벌 및 제한이 이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정보의 부재로 인해 부정수급을 인지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에게도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경기 광주시

##### ○ 민관 협력

- 지역사회 내에서 민관의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않음.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으나, 민간 위주의 협업과 정보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에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도적 허가가 필요함.

##### ○ 전산상의 정보 공유

- 수급권의 선정과 탈락, 주거 형태(전월세, 자가 등)의 변화, 수입의 변화, 부양의무자의 출현, 지원받은 복지서비스(밑반찬, 도시락, 주거 환경, 후원 상품 등)의 공유 필요.

#### □ 인천 부평구

-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전담 인력이 없음.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도 다른 업무 때문에 조사하지 않음.
- 부정수급을 조사하려면 취조, 수사 등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권한이 없음.
- 대상자들이 오히려 수사자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보호할 체계가 없음.
- 조사 중 타 부처(기관)와의 협업에 대한 어려움(정보 수집, 인력 지원 등).
  - 부정수급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없음.

□ 인천 자활센터

- 지자체 팀별로 업무의 효율성이 연동이 바로바로 안 되는 상황이며, 잦은 근무지 변경과 업무 변화로 인해 부정수급에 대해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음.

□ 광주 광산구

- 부정수급 적발자 몇 년 동안 복지서비스 신청 제한
  - 부정수급으로 복지서비스가 중지되었으나 재신청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재신청 후 다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이 없음.

□ 충남 서천군

- 부정수급 관련 법적 근거 및 처벌 강화
  - 농촌 지역으로 부정수급 관련 사례 적음.
    - 사례) 별거, 타 지역 거주 등으로 미거주 수급자 유지 중 부정수급으로 환수되는 경우 있음.

□ 경북 안동시

-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여 감사원같이 부정수급 관련 적정 인력을 확보하여 정기적으로 항시 감시하는 기구를 구성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좀 더 연계를 강화하여 국세청과 연금공단 등의 자료를 실시간 공유하고 추모공원 화장장과 연계하여 사망 후 계속적으로 공적연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도 하고 있음.

□ 경남 산청군

-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인 경우 시설 종사자의 업무 미숙지 혹은 시설 담당자의 업무 미숙지로 부정수급 발생.

## □ 전북 임실군

## ○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법체계의 정비 필요.

-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임.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보다 상세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 A라는 사람이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고 수급자로 생계급여 등 공적부조 혜택을 받아 오던 중 정보 시스템 근거에 없는 소득이 있다는 B의 제보로 확인한 결과 마사지 자격증으로 자택에서 다수에게 마사지를 해 주고 소득을 얻고 있었음.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수급 중지 등 조치를 취하고자 했으나 법적근거가 없고 B의 제보만으로는 소득을 산출할 수 없어 고민하던 중 A가 병원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 고의성이 있으나 조치가 불가함.
  - 위의 사례와 같이 소득은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수급을 중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 반면 일일 노동으로 하루 끼니도 찾아 먹기 힘든 대상은 정보 시스템으로 인해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관리 추진 체계의 재설계가 요구됨.

## □ 전북 장수군

## ○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

- 지자체 신규 공무원 충원 시 사회복지 공무원 일정량 배정 강화 및 사회복지 공무원 전문 업무에 근무토록 규정.

## □ 제주 제주시 (1)

## ○ 부정수급자 발생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림.

- 부정수급자를 확인해도 이후 절차가 복잡하고 대상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에 장시간이 필요하므로 담당자는 자신의 업무와 부정수급자 관련 업무를 동시에 하게 되어 일 처리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이러한 부담감은 담당자가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자 확인을 일부러 등한시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으므로 담당자에 따라 부정수급자가 차등받는 결과를 초래함.
- 현재 '조사계'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자를 확인하여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부정수급자 입장에서는 부정수급이 걸리면 문제가 되더라도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일부 감면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대처함으로써 부정수급자가 점차 지능화되고 양산되고 있음.
-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벌금형을 집행함으로써 담당자 및 부정수급자가 좀 더 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제주 제주시 (2)

##### ○ 부정수급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수급자가 부당하게 수급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을 통보하고 수급자를 만나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심한 반발(욕설, 헐박)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대부분의 부정수급자는 사실 확인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들과의 사이에서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고, 우습게 여기고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부정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별도로 설치하고 팀원들에게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 특별사법경찰권이란: 식품·보건·안전사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의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1956년 '사법경찰관 직무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됨. 즉,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경찰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으로 '특사경'이라고도 함(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 특사경은 법에서 정한 중앙부처나 지자체 가운데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며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음. 이들은 강제 수사와 소환 조사, 통신 및 계좌 조회, 긴급체포, 체포영장 신청, 지명수배, 압수수색 등 경찰에 버금가는 수사권을 부여받음(네이버 지식

백과 참조).

- ▶ 현재, 지자체 환경, 위생, 세무, 산림 업무 담당자 중에 일부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음.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 서울 광진구 (1)

- 부정수급 관련 법적 근거 및 처벌 강화
  - 부정수급자 관련 조사 및 처벌 기관 분리(조사: 지자체 /처벌: 정부 부처)
  - 부정수금액 환수 시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부담, 지자체장의 환수 결정에 대한 부담으로 환수 비율 저조.

### □ 서울 광진구 (2)

- 부정수급 관련 업무 담당 인력 확보
  - 개선 방안: 부정수급 담당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및 업무 처리 절차 등 공유.
  - 부정수급 감소(개선)를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 □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

- 부정수급 관련 업무 담당 인력 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가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절차상 업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담당 인력 확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함.
  - 특히 노인들은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대상자 관리를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함.

### □ 경기 광주시

- 현재 인력은 기본적인 업무를 보는 인력에 불과하고, 충분하게 상담하거나 조

사 및 자원 연계를 하는 등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 적발 업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인력 확충을 통하여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천 부평구

-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전담 인력 없음.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도 다른 업무 때문에 조사하지 않음.
- 부정수급을 조사하려면 취조, 수사 등 권한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권한이 없음.
- 대상자들이 오히려 수사자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보호할 체계가 없음.
- 조사 중 타 부처(기관)와의 협업에 대한 어려움(정보 수집, 인력 지원 등).
  - 부정수급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없음.

□ 인천 자활센터

- 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부정수급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느낌. 대부분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자신의 명의로 아닌 형제자매의 명의로 재산을 감추고 나라의 복지 혜택을 받는 경향이 있음. 수시로 방문 조사가 필요함.

□ 광주 광산구

- 부정수급 관련 전담 팀 구성
  - 현 업무 분장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은 주로 관리팀에서 이루어지나 이에 따른 보장 비용 징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등 사업 부서에서 각각 따로 하게 되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의 불쾌감을 유발함.
  - 부정수급 발생에 따른 사후관리를 전담할 행정조직이 필요함.

□ 충남 서천군

- 부정수급 관련 법적 근거 및 처벌 강화

- 농촌 지역으로 부정수급 관련 사례 적음.
  - 사례) 이혼으로 자녀 양육을 하지 않아 가족관계 단절로 수급자로 생활하던 중 출가한 딸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와 부정수급자로 급여 회수 결정이 되었으나 주거환경 열악과 가족관계 단절, 부양받지 않음을 호소한 사례가 있음.
  - 사례) 수급자로 생활하던 중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조회 결과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이 발견되어 급여를 환수한 사례가 있으나 급여 환수 후 소득이 없어 수급자 유지 중인 경우가 있음.

#### □ 경북 안동시

- 부정수급 전담 인력을 확보하면서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하고 강화된 처벌 규정을 만들어 부정수급을 하면 반드시 더 큰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함.

#### □ 경남 산청군

-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전년도 4~9월분 소득액이 올해 4~6월 확인 조사 시 통보됨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
- 공공근로사업, 산불감시원, 방역소득 등 타실과 관련한 한시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행복e음에서 조회되지 않아, 통합조사팀 업무 담당자가 뒤늦게 입력하게 되어 부정수급자에 해당됨.
  - 자활근로소득의 경우 자활사업 담당자가 행복e음에 소득액을 입력하는 것과 같이 공공근로사업, 산불감시원 등에 근로하는 수급자인 경우 각 담당자에게 행복e음 권한을 부여하여 입력하도록 하면 전월에 일한 경우 다음 달에 바로 반영될 수 있음. 이를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므로 부정수급 발생이 예방됨. 단, 수급자인 경우 입력 조치함.
- 사업소득인 경우 올해 확인조사를 하게 되면 2017년도 사업소득이 조회됨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간주됨(부적정수급이 3회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부정수급

으로 봄). 사업자는 전년도 소득을 올해 신고함으로 인해 행복e음에는 내년도에 조회되는데, 이를 즉시 연계하면(전년도 소득은 올해 반영) 부정수급 기간이 단축됨.

□ 제주 제주시 (1)

- 부정수급자 발생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림.
  - 근로능력자이면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가정 분리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 등 가족에 대해 접근을 금지하며 국가가 그들을 부양 또는 양육할 수 있어야 함.

□ 제주 제주시 (2)

- 부정수급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부정수급을 받는 자 중에 확인 과정에서 심하게 반발하고 행패를 부리는 대상자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부분임.

### 3. 기초연금

□ 서울 광진구 (2)

- 신고포상제도 확대
  - 기초연금의 부정수급을 업무 담당자가 파악하기는 어려워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를 확대하고 대상자가 스스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함.

□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

- 부정수급 관련 정보의 접근 권한 확대
  - 정보 시스템에 많은 개인정보가 있어서 접근 권한 부여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업무를 위해서는 정보 접근 권한이 주어지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 □ 경기 광주시

- 특히 행정적으로 책정되지 않는 근로소득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 보임. 일단, 아이돌봄 도우미 등의 비공식적인 수입에 대한 책정이 필요함.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발 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

## □ 인천 부평구

-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전담 인력이 없음.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도 다른 업무 때문에 조사하지 않음.
- 부정수급을 조사하려면 취조, 수사 등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권한이 없음.
- 대상자들이 오히려 수사자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보호할 체계가 없음.
- 조사 중 타 부처(기관)와의 협업에 대한 어려움(정보 수집, 인력 지원 등).
  - 부정수급에 대한 개선 방안 없음.

## □ 충남 서천군

- 부정수급 관련 법적 근거 및 처벌 강화
  - 농촌 지역으로 부정수급 관련 사례 적음.
    - 사례) 사망 신고 지연으로 부정수급 환수 조치.

## □ 경북 안동시

- 주로 사망하였는데 계속적으로 연금을 탄다든지 하는 문제 등은 사망 신고나 화장장의 인적 사항인 요즘은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음. 옛날보다 많이 개선되어 부정수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나 본인의 재산을 증여 양도하여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음. 이것을 부정으로 봐야 하는지 정상적인 재산 양도나 상속으로 봐야 하는지 고민이 됨.
  - 국세청과 화장장의 사망 신고 등의 자료를 연계하는 걸로 알고 있음.

□ 경남 산청군

- 부부 노인 중 1인은 기초연금수급자, 1인은 연령 미도래이며 상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소득액에 대하여 제때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확인 조사에서 조회되어 환수액이 발생할 경우 부정수급자에 해당됨.

□ 제주 제주시 (1)

- 부정수급자 발생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림.
  -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를 통하여 부정수급의 2 내지 3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함.

□ 제주 제주시 (2)

- 기초연금을 부정수급하는 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부정수급자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위와 같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제 5 장

## 모니터링 사업의 향후 운영 방안

제1절 포럼 주제에 관련한 제언

제2절 2020 포럼 운영과 관련한 제언



# 5

## 모니터링 사업의 향후 운영 방안 <<

### 제1절 포럼 주제에 관련한 제언

#### □ 인천 부평구

- 정책, 이론적인 포럼보다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제로 포럼을 했으면 함.
  - 정신질환자(알코올중독 포함) 사례관리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안(문제)을 다루면 정책, 법, 지침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음.

#### □ 인천 자활센터

-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하는 회의, 기초보장 모니터링의 주제나 영역을 보면 공무원, 즉 주민센터나 구청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지역 자활센터, 즉 민간 위탁기관에서는 자활근로, 즉 조건부수급자나 희망 참여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 전체적인 주제는 비슷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임.
- 내년엔 저소득층인 차상위자까지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복지부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어 그로 인한 파장도 클 것임.
- 저소득층 일자리지원(창출)을 꼭 지역자활센터에서 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으면 함.

#### □ 광주 광산구

- 현행처럼 기초생활보장 관련 분야별 주제를 정해 논의하는 것이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아서 좋음.

#### □ 전북 전주시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을 골자로 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을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함.
  -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인력을 추가로 보강하여 위기에 처한 대상자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사례관리를 통해 통합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임.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동마다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구성(단체장 위촉)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민관 협력의 동기를 부여함.
  - 전주시의 경우 ‘동네복지’라는 이름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별 방문 상담 차량 1대와 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국비, 시비 매칭)하여 특화 사업 및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의 연관성
  -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부터 추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 인력을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하고 위기가구를 찾아내어 지원하는 것임.
  - 그러나 사회복지 인력 보강이라는 부분에서 조직과 인력의 증원은 기본 지침대로 가능한 상황이 아니며, 동별 1명 정도의 사회복지직 증원이 된 상황임.
  - 이런 시기에 복지부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새롭게 시범사업으로 내놓았으며 2019년 전주시는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음.
  - 두 개의 구를 가지고 있는 전주시에서는 완산구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인력 1명 증원 및 간호사 일부 배치 등을 통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함.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본질적으로 지역사

회 돌봄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름만 다른 보건복지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연관성을 언급하여야 하나, 현재 시범사업을 보면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음.
- 관련되어 2020년 포럼 주제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 □ 경남 의령군

##### ○ 기초연금 보편화 지급 논의

- 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대상자: 소득·재산 수준이 단독 월 137만 원, 부부 월 219만 2000원 이하인 가구.
- 노인 100명 중 80명 정도 지급 수준.

##### ○ 직역연금(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제외자 외에 보편 지급 필요성이 대두함.

##### ○ 아동수당은 해당 연령자 전원에게 월 10만 원 지급(2019년).

##### ○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교육급여 논의 필요성

- 목적: 2020년 고 2학년부터 무상교육 실시.
- 2021년 고등학생 전면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 신청 조사 방법 개선.

#### □ 제주 제주시

##### ○ 중위소득 및 평균소득에 대한 고찰.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 및 의료급여 등 지원 사업의 정량화.

#####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와 기초연금과의 상관관계(추후 급여가 같아질 가능성).

- 자활급여 유예 기간 및 교육 기간 동안 지원되는 생계비에 대한 고찰.
- 부양의무자 축소가 사회적 부양제도에 미치는 영향.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초·중·고 학생 지원 방안에 대한 고찰.
- 개인별로 지원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 법률 정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현실에 맞는지에 대한 고찰(새로운 법률 제정).
- 가정자립지원법률(가칭), 가정구성(타인으로 구성된 가정)법률(가칭)에 대한 고찰.
-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소송인 양성 방안.

## 제2절 2020 포럼 운영과 관련한 제언

### □ 인천 부평구

- 분기마다 포럼을 운영하고 연 1회 정도 워크숍을 하는 방향 등 현재의 운영에 만족함.

### □ 인천 자활센터

- 기초 모니터링 전문위원이 전국에 있다 보니 우리나라의 중심인 세종에서 하는 것 같음.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나 참석률 제고 등을 위해 가끔은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건의함.

### □ 광주 광산구

- 모니터링 단원들이 담당 업무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본인의 업무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칭취만 하다 오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모니터링 단원들이 자신의 담당 업무 수행 중 복지제도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제하고 이에 대해 나머지 단원의 의견을 듣는 것도 괜찮을 듯함.

□ 전북 전주시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모니터링 운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제도가 20년을 맞이함.
- 그동안 수많은 지침 수정 및 보완 등을 거쳐 현재는 맞춤형 급여 기준을 적용하는 세분화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기본 제도 안에서 최저생활 유지가 힘든 대상자에게 공적 지원을 적용하는 소득 및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확대되어 옴.
- 그럼에도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는 끊임없이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며 자살 및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원인을 사회복지행정의 문제로 규정함.

- 포럼 운영의 발전 방향

- 포럼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의 다른 현안에 대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모니터링 제도 운영을 통하여 수렴한 건의 사항 및 개선점이 정책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경남 의령군

○ 사회복지 분야가 다양하므로 민간 분야 참여자의 확대가 필요함.

□ 제주 제주시

○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위원과 함께 하는 난상 토론.

○ 위원 소속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작업을 통한 통계.

- 위원들이 함께 1년에 한 번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료 생성.

□ 인천 부평구

○ 서울, 서울 외 도심, 그리고 읍면 등 지역의 특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이나 현안 사항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유하기를 바람.

□ 광주 광산구

- 현행처럼 당일 포럼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 좋으나,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정도는 워크숍을 제안함.

## 참고문헌 <<

- 김태완, 전지현. (2016).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사법경찰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61886&cid=43667&categoryId=43667>.
- 매경이코노미. (2018. 8. 3.). '사상 최악' 대한민국 자영업-폐업률 88%...자영업자 십중팔구 망해 재취업·연금 '하늘의 별'...빛만. 산더미.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18&no=487660>.
- 보건복지부 블로그. (2017. 7. 7.). 불안한 청년들을 위한 정신건강관리법 3가지. <https://blog.naver.com/mohw2016/221046274671>.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201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 이현주, 광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중앙일보. (2019. 1. 30.). 대물림되는 빈곤...극빈층 10명 중 4명 "조부모대부터 가난". <https://news.joins.com/article/23334595>.



## 부 록 <<

「제7기 기초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 명단

구분	지역	이름	기관명
1	서울	김정희	광진구청
2	서울	임영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3	서울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4	서울	김금순	광진구청
5	경기	이상복	광주시노인복지관
6	경기	서경애	광명시청
7	경기	최재권	고양시청
8	경기	이수남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9	인천	김신숙	인천희망지역자활센터
10	인천	이정석	부평5동행정복지센터
11	인천	조기은	서구청
12	강원	남궁명	홍천군 서석면사무소
13	강원	조정현	강원광역자활센터
14	충남	김연실	서천군 중천면사무소
15	충남	김영숙	금산군 추부면사무소
16	충남	최은희	충남복지재단
17	충남	허수자	서천군청
18	광주	김진호	광산구청
19	대전	김성희	대전광역시 동구청
20	경북	박설희	울진군청
21	경북	이동형	안동시청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22	경남	문형규	의령읍행정복지센터
23	경남	조만선	산청군청
24	부산	최영월	부산 남구청
25	전북	강원선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주민센터
26	전북	곽동순	전주시 풍남동 주민센터
27	전북	김영순	군산시청
28	전북	마형준	장수군 천천면사무소
29	전북	이명숙	임실군청
30	전남	박성렬	영광군 불갑면사무소
31	제주	김근영	제주시청
32	제주	황영호	화북동 주민센터

